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좌담회 :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한글서체
한글서체

생협평론 2012 봄 (6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엄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2년 3월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 / 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2 봄 (6호)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7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19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31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번역: 김연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5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 (関西大学商学部教授)	59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73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86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106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홍순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115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4
르뽀 세 가지 물음 - 정리하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정 (르뽀작가)	125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139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156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60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얼마 전 무한도전이 4주째 결방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관심 있게 보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런가보다고 지나갔다. 그런데 1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MBC 수목드라마가 막바지 2회를 남겨두고 결방을 예고한다.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혼자 사극 톤으로 중얼거리면서, 나는 무너졌다. 무슨 재미로 일주일을 살아야한단 말인가? 나의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참을 수 없었다. 결방 이유를 알아보았다. MBC 노조가 파업한지 한 달을 훌쩍 넘겼고 해당 프로그램의 PD가 늦게나마 파업에 동참해서란다. 방송을 내보내는 의무를 저버리다니?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파업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나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 보도를 막는 데서 나아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요구하는 사장과 경영진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MBC노조는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는 노조 측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PD들에게 해고, 정직, 감봉 처분을 내리면서 파업 불참자들에게는 불참 수당을 지급하는 사측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노조 측이 옳다고 시비를 가렸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도 살펴보았다. 무한도전 골수팬들도, 해를 품은 달의 폐인들까지도 예능프로그램이 주는 즐거움은 유보할 수 있다면서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나는 행복해졌다.

이번 프로그램 중단 사건은 개인의 일상이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비민주적인 언론사의 행태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PD를 파업에 나서게 등 떠밀고, 결국엔 그것이 한 시민의 일상의 즐거움을 파괴한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 편파 보도를 종용하는 MBC 경영진의 독선과 부패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받겠다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때 주인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진정한 주인인 것이다. 언론사가 시민들에게 진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 언론사를 벌해야 하는 것이 주인인 시민들이 할 일이다. 정치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를 하면 그 정치인을 벌하고 바른 정치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주인이 할 일인 것이다.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누가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답하겠다. 민주적인 조직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진 개인은 민주적으로 운용되는 협동조합을 싫어할 수 없다. 협동조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민주적인 사고를 갖추게 되고 민주적인 실천을 몸에 익힌다. 협동조합과 민주주의는 이렇게 상호 선순환적으로 발전한다.

<생협평론> 6호는 특집으로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글들을 모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전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글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에도, 다섯 논자가 좋은 글을 보내주셨다.

협동조합의 고유한 민주적 특성이 경제 위기 극복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제학 이론을 가져다 설명해주는 정태인의 글을 비롯해서, 협동조합의 경험이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 협동조합들의 사상과 실천 사례에 대한 정원각과 김현대의 글, 일본 협동조합은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스기모토 타카시의 글, 한국의 정치 사회적 암흑기인 70년대에 협동조합이 민주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신철영의 글 등으로 특집을 묶어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협동조합 진영에서 연구할 의미 있는 주제를 하나 더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편집자는 감사한다. 

협동조합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좌담회 :

-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한국 민주주의는 왜 후퇴했을까- MB만 없으면 OK?

“예나 지금이나 저는 경솔합니다.” 강연마다 빠지지 않는 얘기다. 자기비하가 한 자락 스며들어 있지만 이제 지긋한 나이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다짐이기도 하다.

나에게 주어진 <생협평론> 원고의 주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협동조합”이다. 기획의도는 “한국사회의 정치현실, 민주주의 후퇴를 민주주의의 이론으로 설명해보고…”로 시작한다. 왜 경제학도에게 민주주의 이론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난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쓰겠다고 덤석 받아들였단 말인가. 아무리 생협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난 몇 년여 관련 논문을 읽었지만 거기에 민주주의 이론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학술 구글에 “cooperative democracy”를 검색해 봐도 나오는 건 기업 내 민주주의 이야기일 뿐, 기획의도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어쨌든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후퇴의 증거를 대표하는 사례로 무엇을 먼저 집어낼지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 예컨대 기본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가 대폭 후퇴했다는 걸 들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징조를 예언한 미네르바를 잡아 가둔다든지, 자신의 언론 특보들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히고 조중동을 TV에 진출시키기 위해 온갖 무리한 짓을 저지른 것만 봐도 그렇다. 원래도 무소불위였던 검찰은 하늘 아래 무서운 것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인권운동가들의 항의 데모가 끊이지 않는다. 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운치 않은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이명박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일 것이다. 왜 우리는 그를 선택한 것일까? 적어도 그를 선택한다 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무능, 그리고 대안 없음을 애써 호도하는 데 그쳤을까?

‘747’(경제성장률 7%, 10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GDP 세계 7위)이라는 참으로 허황된 성장 구호를 당시에는 왜 받아들였을까? 나는 “이민가세요, 아니면 시골로…”라는 글을 써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붕괴할 것이라고 한탄했지만 주위에서는 지식인들까지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이제 와서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를 뚫하고 그래도 자기니까 이만큼 위기 극복을 한 것이라고 적반하장의 자화자찬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내 보기에는 바로 그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그 엉터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터지지 않은 것이다. 즉, 세계적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취임 초기에는 7%가까운 성장을 했겠지만 적어도 3년차에는 거품이 터졌을 것이다.

당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던 건 2008년 총선이였다. 선거 당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의 현수막에 걸린 공약은 똑같았다. ‘특목고 유치’와 ‘뉴타운 유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구호는 당시의 투기심리, 그리고 지금도 저 깊은 속에 잠재해 있을지도 모르는 투기심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과 교육은 계층상승의 하늘로 올라가는 굵은 동아줄, 아니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동아줄이다. 즉, 우리는 모두 투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남이 다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남이 안 할 때 나만 하면 대박이다.”라는 두 결론이야말로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증거이다.(사교육과 부동산투기에 대입해 보시라)

그러나 2010년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대반전을 꾀한다. 무상급식으로 시작한

논쟁은 급기야 보편복지에 대한 요구로 확대되었고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둔 각 당은 복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에서만 갈릴 뿐 너도 나도 조금 더 참신하고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데 급급하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롤즈에 따르면 “무지의 장막으로 뒤덮인 원초적 상태에서 선택하는 원칙이 곧 정의”이다. 예컨대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부자로 태어날지, 예컨대 남성일지 아니면 여성일지, 또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다. 경제학 용어로 말해서 우리가 ‘위험기피적’이라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택할 것이다. 즉, 우리는 로또심리에 기대어(나만은 로또에 당첨되고 내 아이만은 일류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대박의 꿈을 꾸다가 어느덧 루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당시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장하준의 『23가지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즉, 현재 민주주의 후퇴의 원흉임에 분명한 이명박씨를 택한 것은 우리 안의 투기심리였다. 우리는 과연 투기심리를 포기한 것일까? 그러므로 이명박씨만 없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 조금 더 나아가서 여야 모두 약속하고 있으니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 양극화

과연 지금 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집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너무 좁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정확히 얘기해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대박이 나서 수십억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입시경쟁을 없애자는 행동, 예컨대 그래도 진보적으로 보이는 후보에게 사교육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한국과 같은 학력사회에서,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려면 아이가 일류대학에 가야 하는데 그건 확률 상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이 평준화되고 직종별 임금격차도 없어진다면 삶은 너무 밋밋해질 것 같고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우아한 삶을 누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다른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고 실제로 부동산 값은 또 들쭉거릴 것이고 웬만해선 입시경쟁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사실 투기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아니 허생이 안성 부근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서 돈을 번 것을 보면 상품사회가 되면서 일반화된 현상일지도 모른다. 기실 지난 20년간 부동산과 증권 투기는 전 세계를 지배했다. 금융세계화의 결과이다.

금융규제를 없애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미국의 부동산 값은 뛰기 시작했다. 닌자(NINJA, No Incom, No Job, No Asset), 즉,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동산 회사에서 대출을 권했다. 10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데 10만 달러를 모두 빌려줬으니 누가 집을 사지 않겠는가? 이 위험천만한 채권을 파생상품(CDO)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판 것이 현재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집값이 내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은행은 옛날에 비해 집을 사거나 집을 담보로 하면 훨씬 쉽게 돈을 빌려 줬다. 너도 나도 집을 사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뛰고 팬스레 부자가 된 기분에 소비를 늘렸으니 현재 우리나라 가계는 9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언제든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가면 거품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당시 부자들과 조종동은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다), 대출비율(LTV나 DTI)을 규제했기 때문에 현재

의 아슬아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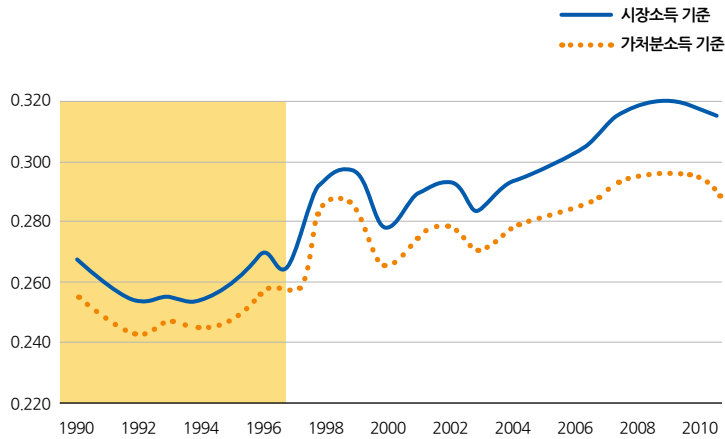
투기라는 면에서, 그리고 일반인이 돈을 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과 주식은 동일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돈이 있는 기업도 투자보다는 투기를 택할 것이다. 정부의 환율정책과 각종 감세로 대기업에는 돈이 넘쳐나지만 국제경쟁에 꼭 필요한 투자를 빼곤 돈놀이나 땅투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하청기업의 하도급 단가를 수시로 인하하고 자영업마저 침범하니 이제 한국은 대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삼성은 이제 한국의 관료, 정치, 사법부를 모두 매수했다. 공무원과 대기업, 전문직을 제외하곤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동시에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5대 불안이 시작되었다. 복지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 지출을 늘려도 불안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창하는 복지국가도 실제로는 불가능해진다.

왜 복지예산을 늘려도 상황은 악화될까?

다음 그림은 소득불평등지표 중 가장 간단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컨대 지니계수가 0이라면 전 국민의 소득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은 90년대 중반까지 소득불평등이 소폭 개선되거나 갈짓자 걸음을 보이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붉은 선은 재분배 정책이 반영된 결과를 나타낸다. 붉은 선의 추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복지정책의 결과로 불평등도가 다소 수그러든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푸른 선의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진다면 아무리 복지예산을 늘려도 평등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복지의 한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비교)

즉,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GDP에서 이윤 몫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 이윤 몫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그리고 임금 몫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격차,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 푸른 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이유이다. 또 하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가 한편으로 쏠려서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양극화된 것도 지니계수가 커지는 이유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였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하를 막지 못했으며, 자산 거품을 부추겼기에 결국 국민의 고통을 줄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정권을 내 준 진정한 이유이다.

세금 더 거둬 재분배정책을 쓰기 전에 시장에서 분배가 악화되는 것부터 막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시장만능의 정책기조, 그리고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운용,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쓰면서 복지사회

를 만들겠다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이다. 한-미 FTA는 이런 모든 정책의 종결판이자 되돌아갈 길마저 끊어버린다.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 노동유연화를 통해서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정책, 부동산과 금융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대기업의 하청단가를 용인하는 정책, 현재의 입시경쟁을 그대로 두고서는 복지국가도, 따라서 실질적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다. 물론 대안은 있다. 결론만 말한다면 그동안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기조를 “안으로부터, 밑으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경제가 “안으로부터, 밑으로부터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공동체와 밀접하게 결합한 협동조합의 신뢰와 협동의 유전자를 공동체 내에 퍼뜨릴 수 있다면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은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협동조합은 1인1표의 원리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자체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는 1주1표로 운영된다. 이른바 주주자본주의이다. 다소 어려운 얘기지만 신고전파 기업이론은 알키앤과 템제츠 이래 주주가 잔여청구권, 즉,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이윤을 차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나 은행, 부품공급업체는 계약에 의해 자신의 몫을 이미 지불받았고(소비자나 지역주민 등 외부 이해당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기업 성과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야말로 기업의 주인이라는 얘기다. 노동자나 은행은 이미 자기 몫을 받았으므로 경영을 감시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대리인 이론, 그리고 이 모든 권리는 계약에 의해 확정되므로 기업은 계약의 결합(nexus)이라는 계약이론이 덧붙는다. 이 기업이론은 거시의 효율시장이론과 더불어 주주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경제학에서 찾는다면 이해당사자이론(stakeholder theory)의 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나 스페인 몬드라

곤의 예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부품업체, 지역주민까지 모두 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가장 광범위한 이해당사자회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합원이라면 출자자,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의사결정에서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것이다. 반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협동조합이 다중의 이해관계자 지배구조(multiple stakeholder governance)라는 난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조합원의)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행동원리와 목적함수(기업이윤극대화를 넘어서기 때문에)가 복잡해지며 유인과 보상의 문제를 물질적 이해관계와 협동조합 고유의 사회규범을 결합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협동조합의 사상은 인간의 복합성(인간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고 사회적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해야 한다)을 반영한다는 면에서는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최근 목적함수를 변화시켜서 협동조합이 생존가능하고 그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이미 민주주의라는 해결책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때문에 밀과 같은 개혁적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와 같은 좌파 경제학자 뿐 아니라 발라(알라스)와 같은 보수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도 협동조합을 예찬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을 둘러싼 복잡한 경제학 논쟁을 일일이 소개하긴 어려운데¹ 쉽게 얘기해서 협동조합은 돈과 사람을 모으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언제나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모으는 데 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통 일반인의 부에는 한정이 있을 것이며, 또한 협동조합에 고유한 평등주의는 뛰어난 인재의 가입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¹ 개략적 소개는 정태인, 사회경제론, 리얼진보 레디앙, 2010, 을 참조하라.

현실에서는 협동조합의 신규 가입자는 상당한 액수의 가입비를 내야 하므로 이런 문제는 완화된다. 또한 레가나 몬드라곤에서는 단위 조합 수익의 일정비율을 중앙회에 내서 고유의 기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비분리자산의 재투자가 일정한 비율로 이뤄지는 것(몬드라곤의 경우 이윤의 30%를 재투자)은 합판협동조합에서 보듯, 경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축적을 돕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경기 상황에 대해 주로 임금의 변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탈리아의 레가는 단위 협동조합이 파산할 경우 일정한 교육을 거쳐 다른 협동조합으로 옮겨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실행한다.

잔여청구권이 있는 주주가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열심히 일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경제학의 주장과 달리 동료 간의 상호감시가 더 효율적이어서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협동조합 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 신뢰가 존재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실제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은 감시가 거의 불필요하며 자발적 노력으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인재 부족의 문제도 협동조합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 해결할 수 있다. 볼로냐 대학의 자마니교수는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 존재이며 누구에게 통제되는 노동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뛰어난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협동조합 고유의 민주주의가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협동조합, 그리고 민주주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쳤을 때 협동조합은 융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협동조합이 위험을 공유하고 협동으로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원칙(사회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적 위기란 심각한 사회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기적 인

간의 경쟁에 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은 협동이며 이 협동을 자아내는 여러 규칙을 맨 밑에서 조율하는 것은 신뢰이다. 지난 20여 년 간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 행동/실험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협동하는가라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들을 찾았다.

‘혈연 선택’(가족 내에서는 협동한다), ‘직접 상호성’(direct reciprocity, 장기거래에서는 협동한다. 즉 단골한테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간접 상호성’(indirect reciprocity, 인간은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상호성’(network reciprocity, 협동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집단 선택’(협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더 우월하다)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사회에서는 이제 협동이 사회규범(social norm)이 되고 협동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갖게 된다. 협동하는 사회에서는 상호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협동하는 사람에게는 협동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거나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호성이다. 상호성이란 사실 서양의 황금률(“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이나 맹자의 측은지심(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수오지심(규범 위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표현이니 오랜 인류의 지혜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협동할 것이라고 믿는, 신뢰(trust)의 사회에서 협동은 애써 노력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이런 다섯 가지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최근의 진화생물학이나 행동경제학을 숙지한 결과는 물론 아니겠지만 ‘협동이 살 길’이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집단의 행동규범으로 만든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다.

공동소유와 공동이용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지혜이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식량을 공유해 왔는데 그것은 구성원 모두 사냥에 실패했을 때

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다. 또 하딘의 단언과 달리 인류는 오랫동안 ‘공유지의 비극’을 맞지 않았는데 그 원리 역시 공동체의 공동소유와 이용의 상호적 사회규범이었다.

민주적 운영, 교육 및 홍보는 집단 내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호신뢰를 촉진시킨다.(간접 상호성의 제고) 자치와 자율은 행동원리와 규범이 다른 정부 및 시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미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인간협동의 다섯 가지 규칙에 비춰 더욱 구체화해서 발전 전략 수립에 응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었지만 에밀리아로마냐를 가보면 협동조합의 원리가 사회 전체에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지역은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경제를 자랑하고 있다.

글의 전반부에 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제운영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그런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글의 뒷부분에서 보았듯이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며 위기 극복의 원리를 체화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에서 생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SCD)에는 로컬 푸드 운동과 지역 음식점, 소비자협동조합이 연계되어 있다. 퀘벡지역의 식품/에너지 협동조합, 시카고의 협동조합 시장, 디트로이트의 카스 코리도 협동조합 등은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지역의 자영업자, 소매상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저소득 계층의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고 값싼 제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 역할도 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종종 위기 때 최종 구매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농업과 영세 제조업자들을 살려내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공동체 정신이 발현된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 생존이 공동체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아가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가 사회경제인 동시에 사회경제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공동체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 세우고 공동체 내의 자원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지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사회경제의 운영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사회경제는 민주주의의 미시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경제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서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공동체에서 생태와 민주주의가 꽃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은 그 정의와 가치 그리고 원칙에 항상 민주주의가 들어간다. 그것은 초기 협동조합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민중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결사체를 만든 것이 협동조합이고, 그 사업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물론 세계 곳곳의 협동조합 중에는 우리나라의 농협과 같이 정부 필요에 의해 만든 협동조합도 적지 않다. 이런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중(시민)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든 곳에서는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한다.

로버트 퍼트남은 그의 저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2000, 234-239쪽)에서 시민적 전통이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의 제도 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1915년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일인당 협동조합 가입 숫자가 시민적 전통과 제도 성취가 낮은 몰리제 주에 비해 18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 회원 수가 많은 곳에 시민적 전통이 강하고 그 시민적 전통이 강한 곳에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의 제도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협동조합과 민주주의는 과정과 탄생 그리고 운영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기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평등권(1인1표)이 들어가게 된 배경과 이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쟁취 그리고 확산을 위해 기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8명의 조합원이 평등하게 실시한 로치데일공정선거조합의 선거권

1-1. 시대적 배경

영국에서 로치데일공정선거조합이 출범한 1844년에는 노예만이 아니라 여성과 성인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국회의원을 선출할 투표권이 없었다. 성인 남성에게 실질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들어선 후다. 그때서야 20세 이상 성인 중 유권자가 70%를 넘어 서게 된다. 다음의 <표 1>은 1831년부터 1931년까지 100년 동안 영국의 유권자 변화 비율이다. 여성은 이보다 더 늦게 투표권이 주어진다.¹

<표 1> 영국의 유권자 비율²

년도	1831	1832	1864	1868	1883	1886	1914	1921	1931
20세 이상 중 유권자 비율	4.4	7.1	9.0	16.4	18.0	28.5	30.0	74.0	97.0

1-2. 노동자의 참정권을 위해 싸운 차티스트

1776년 미국의 독립, 1789년 프랑스대혁명 등에서 민중들이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은 보통 사람,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할 수 없었고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했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은 1800년대에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부르주아들과 연대하여 투쟁했지만, 1832년 선거법 개정은 부르주아 계급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그쳤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보통선거권

¹ 뉴질랜드(1893), 오스트레일리아(1903), 핀란드(1906), 노르웨이(1913), 오스트리아(1918), 독일(1919), 덴마크(1915), 스웨덴(1918), 네덜란드(1919), 캐나다(1920), 미국(1920), 영국(1928), 프랑스(1945), 이탈리아(1946), 벨기에(1948), 일본(1952)이다. (제프 일리 저/ 유강은 역,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뿌리와 이파리, 2008, 60쪽) *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마오리, 아보리진 등의 원주민에게는 늦게 참정권 주어짐.

² 로버트 달 저/ 김왕식 외 역, 『민주주의』, 1999, 동명사, 42쪽의 그래프를 표로 재구성함.

은 반영되지 않고 부르주아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다.(정병호, 1987, 43쪽) 1838년 노동자들은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선거구의 공평화, 매년의 의회 소집,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 세비 지급 등 6개항의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내걸고 광범위한 정치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을 차티스트(헌장주의자)라 부른다. 차티스트들은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1842년 다시 325만 명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거부하고 탄압하였다.

1-3. 차티스트 운동의 후에 로치데일

2차 청원과 파업 등이 실패한 이후 차티스트 중 일부는 로치데일공정선거조합에 참여한다. 1843년 10월부터 1년 동안 돈을 모아 1인당 1파운드씩 출자하여 1844년 12월12일 출범하는데 창립총회의 의장은 차티스트 마일드 애쉬워드가 맡았다. 28명의 발기인 가운데 차티스트는 애쉬워드를 포함하여 9명이었고 여성도 1명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보통선거권, 참정권을 요구했던 차티스트들의 정신은 로치데일공정선거조합에 그대로 이어졌다. 그 영향으로 로치데일공정선거조합은 초기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1인1표라는 민주적 방식을 정한 것이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관계없이 평등한 선거권을 가졌다. 초기에는 1인 모두 평등하게 1파운드씩 출자하고 1표를 행사했지만 이후에는 출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1인1표를 하여 협동조합이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구성체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적구성체임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듯 19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사회에서는 20세 성인 남자 열 명 중 한 사람만 겨우 선거권을 가진 시기에 로치데일에서는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2. 스페인 공화정을 지지한 바스크 지역의 협동조합

2-1. 바스크 지역의 오랜 자치적 특성

바스크 지역은 카탈루냐, 갈리시아 등과 함께 스페인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바스크는 피레네산맥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 지역의 바스크, 프랑스 지역의 바스크가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스페인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받을 수 있었다. 13세기 무렵 카스테리아(스페인 통일 전의 나라 중 하나)의 알폰소 8세가 ‘푸에로스’라는 자치특권을 주었고 후세의 왕들이 계속 인정하였다. 자치특권은 ‘수리권, 광맥사용권, 입산권, 통행세 면제, 세금 면제, 병역 면제, 통상의 자유, 시민권’ 등이다. 이후 이 자치권은 바스크 다른 지방인 기푸스코아, 아라바, 비스카야 등으로 확대되었다. 푸에로스는 바스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19세기가 되어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 푸에로스를 회복하는 것이 바스크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2.2. 제2공화정을 가장 먼저 지지한 ‘아이발의 협동조합’

스페인도 19세기에 다른 유럽 나라의 영향을 받아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데 제1공화정은 1873년 출범하지만 1년도 못가 무너지고 왕정이 복귀하였다.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랬듯이 19세기에는 부르주아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과 상공업 분야의 동업자 조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바스크 지역에 있는 아이발이라는 마을에서 무기제조동업조합이 만들어져 20년 동안 운영되었다. 이후 아이발에는 한 시청 직원의 노력으로 재봉틀을 만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다시 출범하였고 이들은 1931년 출범한 스페인 제2공화제를 가장 먼저 지지하였다. 그 시청 직원은 1936년 스페인 내전 이후 남미로 망명을 가고, 1970년 칠레 아옌데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에 가서 협동조합을 지도하고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아옌데 정권의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2.3. 스페인 내전과 바스크

제2공화정은 오래 가지 못하고 왕당파와 교권 그리고 파시즘을 내세운 세다당(CEDA) 등이 득세하며 1933년에 우익 정권이 성립되었다. 이후에 사회당 계통의 노동총동맹(UGT)과 아나키스트 계통의 전국노동연합(CNT)이 제휴하여 1936년 귀족인 사모라 대신 공화주의자인 아사냐를 대통령으로 추대하

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봉건 세력의 지지를 받은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 내전이 일어났다. 1939년 3월 프랑코 장군은 독일·이탈리아의 군사원조를 업고 수도 마드리드를 제압하여 내전에서 승리하였다. 스페인 내전은 그 과정 속에서도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작가 헤밍웨이는 이 전쟁에서 바스크 지역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명작을 남겼고 『동물농장』, 『1984년』의 작가 조지 오웰도 반파시즘에 맞서 전쟁에 참여한 경험으로 『카탈루냐 찬가』라는 명작을 남겼다.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는 바스크 지방에 있는 게르니카 마을에 프랑코를 지원하는 독일 전투기가 폭격을 하여 수백 명의 민간인이 죽은 사건을 고발한 그림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프랑코는 시민군에 참여한 바스크, 몬드라곤의 사람들을 수없이 처형했다. 바스크 지역에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든 호세마리아 아리스멘데 아리에타 신부는 내전이 끝난 후에 재판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신부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바스크 지역은 전통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곳이다. 그래서 1972년에 193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44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관계없는 별개의 협동조합이었다.³

3. 협동조합 축구팀 FC바르셀로나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3-1. 구단주를 조합원이 선출하는 협동조합 축구팀

FC바르셀로나는 1899년 호안 캄퍼가 지역 신문에 ‘축구팀을 만들고 싶다’는 광고를 내면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축구팀이다. 지금은 축구만 아니라 농구, 핸드볼, 물러하기, 육상, 배구, 싸이클링, 여성 풋볼, 필드하키 등 다양한 스포츠 팀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7만3천 명의 출자자가 있으며 4년에 한 번씩 구단주인 회장을 선출하며 구단주는 8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FC바르셀로나의 회원 중 가입 경력 1년 이상,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가지며 이사가 될 수 있다.

³ 石塚秀雄, 『바스크·몬드라곤 협동조합 마을에서』, 1991.

3.2. 군사정권, 파시즘에 대항하는 축구팀

FC바르셀로나에 연관된 민주주의와 반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많다. 독재자 프랑코 이전에도 있던 일이다. 1925년 6월14일, 오르페오 카탈라(바르셀로나의 합창단 이름)를 기념하는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관중들은 스페인의 국가를 조롱했다. 당시 계속되고 있던 미구엘 프리모 데 리베라의 독재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의미였다. 독재 정권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경기장을 폐쇄하였고 감퍼는 강제적으로 회장직을 빼앗겼다.(위키피디아, 한글판)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자 프랑코는 바르셀로나의 회장인 호셉 수를을 암살했다. 1937년 여름 멕시코와 미국으로 떠난 팀은 당시 정부인 스페인 제2공화정의 대사로서 대우를 받았다. 한편 1938년 3월16일, 파시스트들은 클럽 사무실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심각한 파괴를 가했다. 1939년 프랑코가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FC바르셀로나는 이름을 강제로 CF바르셀로나로 바꾸고 클럽 로고에서 카탈루냐 국기 디자인을 삭제해야 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와 감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는 바르셀로나 선수로 뛰는 것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프랑코가 지원하는 클럽에서는 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거절하고 바르셀로나로 왔다고 말했다. 요한 크루이프는 현재 FC바르셀로나의 명예 회장이다.

4. 이탈리아 레가 협동조합인들의 반파시즘(무솔리니) 운동

4.1.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출발

이탈리아는 중세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도시 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페인, 오스만 트루크, 프랑스, 프리시아 등 외세의 침략을 받아 사분오열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19세기까지 지속되어 이탈리아 국민들은 하루 빨리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했다.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였다. 1854년 토리노에 최초

의 소비조합이 생기고 1856년에는 알타레에서 유리 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1864년에는 지역 공제조합이 주도하여 민중은행이 설립되고 1880년에는 신용협동조합이 140개로 늘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인 노동헌장 반포는 가톨릭의 참여에 크게 기여했다.

4.2. 레가협동조합의 탄생과 분열 그리고 파시스트의 탄압

1886년 130개 협동조합 대표들이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을 창설하였고 1893년에 이탈리아전국협동조합동맹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1898년 일부 비사회주의 조합들이 탈퇴(자마니, 2012, 103쪽)를 했고 1919년에는 가톨릭계 협동조합이 탈퇴하여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이바노 바르베리니, 2012, 149쪽)을 창립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자 파시즘은 협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특히, 파시즘의 공격 대상은 좌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레가협동조합이었다. 이 시기에 레가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공산당 당원이었던 조합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파시즘에 대항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4.3. 공화국 헌법에 협동조합 조항을 넣음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탈리아에는 1만2천 개의 협동조합과 30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1945년 5월 가톨릭 산하의 조직인 협동조합총연맹(1967년부터 Confcooperative)이, 9월에는 협동조합전국연합(1966년부터 Legacoop)이 재결성되었다.⁴ 이념적 분열이 있었지만 새로운 공화국 헌법에 협동조합 조항을 넣으려는 노력을 함께 했다. 그 결과 헌법 제45조에 협동조합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었다. 자마니 교수는 같은 책에서 협동조합에 비분할 자산을 형성하고 그 자산을 조합원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동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2000년 들어서 우파 정권의 베를루스코니는 협동조합에 대해 주었던 세금 감면 조치를 크게 축소하였다.

5. 스웨덴 새로운 협동조합의 관료화된 코포라티즘에 대한 비판과 참여

5-1. 스웨덴의 협동조합

존스턴 버첼은 그의 책(2002, 55쪽)에서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이 서로 발전한 현저한 사례로 스칸디나비아(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를 들고 있다. 신필균⁵은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조직으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꼽고 있다.(1999, 65쪽) 그리고 장원봉에 따르면 스웨덴은 187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와 대중운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힘은 1870년대 자유로운 교회,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을 포함하는 노동운동, 소비자협동조합운동, 스포츠 운동, 주택 및 임차인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성인교육기관 등이 대중운동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6, 74쪽)

5-2. 스웨덴 협동조합 운동의 전개와 문제

1850년대부터 시작한 스웨덴의 소비자협동조합은 1899년 40개의 조합으로 KF(소비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단위 조합에 대한 연락, 교육선전의 중앙기관으로 역할을 시작하였다. 1902년에는 ICA에 가입하고 1905년부터는 도매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사업을 하는 조직체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발전하여 1956년에는 대형협동조합 백화점, 1963년에는 ‘오브스’라는 할인판매점, 1970년에는 전국배송센터가 건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172만 세대(국가 전체 세대의 50%)가 가입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이상 협동조합대사전) 한편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상업주의적으로 되고 조합원들의 수동성이 심화되었으며, 고등교육 출신이 점점 더 많아진 경영진은 자신감이 증대했다. 1980년대 중반에 KF는 여전히 큰 기업이었지만 업적은 최악이었다.

4 자마니, 앞의 책.

5 스웨덴에서 국가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을 지냈.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5-3. 협동조합의 비판, 참여 정신을 일깨우는 스웨덴 새로운 협동조합

스웨덴은 복지국가 모델이 정착되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이 주도한 국민운동 자체가 코포라티즘의 틀에 들어가 정부와 밀접하게 결합함으로써 그 비판적 정신을 잃고 관료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 있는 국민운동을 재활성화하여 스웨덴 민주주의에 활력을 주려는 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운동의 구체적인 담당자가 된 것이 사회경제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다.(사토 요시유키, 2002, 137쪽) 이 새로운 협동조합은 직원협동조합, 이용자협동조합 그리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6. 그 밖의 나라에서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의 만남

6-1. 협동조합을 통해 경영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베네수엘라 협동조합⁶⁾

남미를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로 만들기를 꿈꾸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5개국을 독립시킨 시몬 볼리바르. 그 볼리바르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차베스가 집권 후에 만든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을 볼리바리안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에도 오래된 협동조합이 있으나 차베스 집권 이전 협동조합 수는 762개에 불과했다. 이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5년 현재 153,000개의 협동조합에 150만 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볼리바리안 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 농민들의 생산 연합체 형태다. 그러므로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력을 1,230만 명이라고 할 때,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99년 제정한 헌법 70조, 184조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01년 제정한 ‘협동조합 연합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이다.

이렇게 정부의 주도 하에 만든 협동조합 중에는 경영, 회계, 행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 협동조합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 협동조합도 있다. 하지만 많은 협동조합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협동조합을 키우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본의 파업에 대해 민중이 스스로 경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경영과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시도되는 국가 주도의 협동조합이 성공할 것인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자본과의 비타협적 투쟁과 압도적 정치력의 우위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볼리바리안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다.

6.2. 오스트리아에서의 협동조합, 정당, 노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산업 민주주의⁷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다. 이 사례는 1980년 한국노총이 발행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에 나오는 것으로 원 저자는 A. E. 라우터(오스트리아 젠틀랄컨숨 이사장)이고 영국의 협동조합연구회가 1977년 4월 특집으로 발간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다.

오스트리아는 조합주의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3자가 한 테이블에서 논의한다. 예를 들어 최저휴가기간을 4주로 늘리는 과정과 생산업 분야에 공동결정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오스트리아 노동조합회의’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당,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서로 소통과 정책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방식은 세 조직의 직책을 겸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가 협동조합의 위원을 맡거나 사회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간부 몇 명이 협동조합의 지도자로 일하는 것이다.(협

6 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2007에서 ‘협동조합의 대대적 확산’ 요약.

동조합 조합원은 정당에 개별 참여)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업 분야 공동결정제’와 같은 국가의 중요 정책 참여로 이어져 산업 민주주의를 확대시켰다. 한편 오스트리아 국가 전체에서 40시간 근무제가 보편화되기 전에 협동조합에서 먼저 시도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를 미리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노동조합 간부들이 소비협동조합 내 활동을 통해 기업경영자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6개 나라, 7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글쓴이의 한계로 제한적인 사례만 들었을 뿐 이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위에 기술한 사례만 해도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관료화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국가 변혁기에서 자기 역할, 그리고 산업 민주화를 노력 등이다.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현존하는 국가들 중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로 평가받는다. 물론 북유럽 국가들이 협동조합만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과 함께 상호 작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쟁취와 확산 그리고 정착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협동조합은 기업이지만 그 정의, 가치, 원칙에 민주주의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 결정한 경영적 판단과 결과에 대해 조합원 모두 평등하게 1인1표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복지자료집 II,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1980, 53~73쪽, ‘오스트리아의 소비자협동조합’ 중에서 요약.

<참고 문헌>

- 사토 요시유키, 송석원 역, NPO와 시민사회-결사론의 가능성, 아르케, 200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사회복지자료집Ⅱ), 1980.
- 이바노 바르베리니, 김형미 외 역,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푸른나무, 2012.
- 로버트 달, 김왕식 외 역, 민주주의, 동명사, 1999.
- 로버트 퍼트남,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 제프 일리, 유강은 역,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뿌리와 이파리, 2008.
- 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2007.
-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 크리스찬 사회교육원 엮음,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 1999.
- 윌리엄 F. 화이트, 김성오 역,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역사비평사, 2012.
- 편집위원회, 협동조합대사전, 협동연구사, 1984.
- 정병호, 협동조합론, 대원출판사, 1987.
- 자마니,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2012.
- 石塚秀雄, バスク・モンドラゴンー協同組合の町から, 1991.
- 인터넷 한글위키피디아사전에서 바스크, 스페인 내전, FC 바르셀로나 참조.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대체 불가능한 경제체제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가 곧 시장 경제이고,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기업만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기업=사적이익 추구’라는 하나의 등식만을 배웠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다른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런 기업이 작동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도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경영에 앞장서고, 착한 기업, 위대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되라는 목소리는 많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의 선의를 촉구하는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구멍가게 같은 사회적기업들은 공적 복지를 보완하는 아주 작은 대안에 머물렀다. 사회적 경제를 갈망하는 세력들은, 생각은 정의롭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지식인 집단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실천하는 기업 또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한 전망을 그려내는데 실패했다. 자본주의 대기업의 지배가 굳어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또는 시민 경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누구도 ‘다른 경제’와 ‘다른 기업’을 직접 꾸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주장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추상과 허위의 언저리에서 허우적대기 십상이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 기업들을 직접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협동조합의 세상을 두 눈과 두 귀로 접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겪은 경제와 다른 경제, 대한민국 대다수의 기업과 다른 기업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확신

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현실인데, 그것을 오감으로 느끼기까지는 지독히 멀고 험한 여정이었다. 이 글은 유럽의 선진 협동조합을 직접 취재한 경험을 뼈대로,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스테파노 자마니 부부의 최근 저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에서 많은 생각과 내용을 빌려왔다. 이론적 엄밀성이 떨어지더라도 언론인의 직관으로 ‘민주주의가 DNA로 녹아든 협동조합 기업’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했다. 역시 올 들어 출간된 『몬드라곤의 기적』과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도 참고했다.

1. 유럽 협동조합 사례

1) 라보뱅크, 역피라미드의 민주적 지배구조

라보뱅크는 네덜란드 최대은행으로 협동조합이다. 네덜란드 농업금융의 84%, 예금의 40%, 주택담보대출의 29%, 중소기업 대출의 43%를 차지하고, 조합원 180만 명, 직원 5만 8700명, 자산 6525억 유로(1,011조 원)에 이르는 세계 25위권 은행이다.(2010년 말 기준) 라보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뜰히 넘겼고, 2010년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 세 번째 안전한 은행으로 기록됐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라보뱅크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한결같이 “독특한 협동조합 경영방식 때문”이라는 의견을 붙인다. 왜, 협동조합이어서 강한가?

하나는, 무배당 원칙이다. 오랜 역사의 라보뱅크는 ‘티끌모아 태산’의 기적을 이뤄냈다. 해마다 이익이 나면, 배당 없이 모두 자기자본으로 적립했다. 116년 동안 그렇게 모은 현금이 무려 300억 유로.(46조 원) 그만큼 금융조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재무구조가 건강할 수밖에 없다. 주주 배당을 앞세우는 주식회사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일이다. 라보뱅크의 지배구조 담당 임원인 빌베르트 판덴보스는 “100년 이상 조합원들의 협동으로 쌓아올린 내부적립금이 오늘의 건강한 라보뱅크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라보뱅크는 지

금도 협동조합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민주적 조직운영이다. 조직도와 엠블럼부터 상징적이다. 역피라미드로 그려진 라보뱅크의 조직도는 맨 위에 조합원이 있고, 141개 지역 라보뱅크들이 가운데에,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주식회사의 피라미드 모양 조직도와는 거꾸로다. 상향식으로 올라가자는 발상을 넘어, 처음부터 조합원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웅변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걸어가는 사람을 형상화한 엠블럼은 사람(조합원)이 중심에 있고, 조직 운영에 참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41개 지역은행은 12개의 지역대표자회의로 묶이고, 이 12개의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각각 6명씩 선출해 중앙대표자회의(총 72명)를 구성한다. 이 회의는 일종의 의회 구실을 한다. 1년에 네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판덴보스는 “지역 라보뱅크를 141명의 어머니로, 중앙 라보뱅크를 1명의 딸”로 비유했다. 영·미식 은행이 중앙에서 피라미드식으로 결정권을 갖는데 반해, 라보뱅크는 지역 은행들이 주요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우리 농협중앙회가 지역과 품목별로 구성된 1167개 회원농협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는 것과 천양지차이다. 라보뱅크의 역피라미드식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 ‘경제적 가치’ 또한 확인됐다.

“지역 대표자들 중에는 금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농민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안건은, 정책으로 채택되기 어렵지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적었고, 우리가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빌베르트 판덴보스) 다수 조합원의 이해에 충실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효과적인 ‘위험 회피’ 장치이고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스위스의 최대 소매기업인 협동조합 미그로에서도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기업 경쟁력이 확인된다. 스위스 국민 720만 명 중 200만 명이 조합원이고 종업원 8만 3000명의 스위스 최대고용기업인 미그로는 1941년에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종자’를 바꾼 독특한 역사를 자랑한다. 창업자인 고틀리프 두

트바일러는 당시 100만 스위스 프랑만 갖고 나머지를 모두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내놓았다. 스위스 국민들은 2009년 설문조사에서 두트바일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2위로 뽑아,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실했다. 1위는 아인슈타인이었다.

“우리는 위험한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11개 지역 협동조합들이 모인 위원회 절차를 통과하기 힘들거든요. 최소 시간에 최대 이익을 내라는 주주 중심의 기업 행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주주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라는 것이 ‘주인’인 조합원의 요구거든요.”(미그로의 홍보담당자 마르티나 보샤드)

라보뱅크가 파생금융투자를 꺼리듯이, 미그로 또한 큰 투자수익이 기대된다고 낮은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지는 않는다. 조합원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합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경영에서 관철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2) 가치있는 사업, 행복한 기업문화

미그로는 모든 사업에서 철저하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장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년에 1억 스위스프랑(1286억 원) 이상을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 1년에 45만 명이 이용하는 ‘미그로 클럽 스쿨’이 대표적이다.

나라 바깥으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미그로의 사업전략 또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스위스다움’을 내세워 종업원 8만 명이 넘는 스위스 최대 기업에서 글로벌 사업전략 자체를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과 고객이 스위스 국민인데, 나라 바깥으로 눈 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마르티나 보샤드는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미그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루치 베버는 “지속가능성이야말로 미그로의 DNA”라고 말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협동조합은행인 ‘메르쿠르’는 민주적 가치와 윤리를 제대로 지속가능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다. 대안학교 등 유치원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12.5%에 이른다. 그리고 사회적 프로젝트가 10.8%, 주택 등 개인 대출이 34.2%, 유기농업이 8.1%이다.

“메르쿠르 은행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취약 계층, 장애인, 가난한 아동 등은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주택·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과 일자리에 투자합니다.”(메르쿠르의 사회적 프로젝트 대출 안내자료 중)

유럽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기업들은 한결같이 주식회사와는 다르면서도 강력한 기업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메르쿠르에서는 최고위직의 급여가 전체 종업원 평균의 2배에 불과했다. 이 은행의 메테 튀센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급여가 못하지만, 우리는 일에서 그 이상의 보람을 느낀다”면서 “메르쿠르에서는 가치가 급여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전체 평균 급여는 일반 은행과 비슷하니까, 하위직 연봉은 오히려 높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옮겨온 직원들은 메르쿠르의 자유로운 사무실 문화를 좋아합니다.” 덴마크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인 수사네 베스트하우센은 “백만장자가 인생의 목표라면 협동조합 하지말라”고 말했다.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야후 이탈리아’에서 7년간 일하다가 이탈리아 볼로냐의 우유생산 협동조합 기업인 그라나롤로로 옮겨왔다는 클라우디아 실바니는 새 직장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전 회사에서는 개인 간 경쟁이 무척 심했고, 업무량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곳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여유로우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협동조합 기업문화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3) 몬드라곤의 10대 원칙 “노동자도 투표권”

스페인을 대표하는 몬드라곤이 채택한 민주적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60여개 협동조합 기업 전체를 관통하는 몬드라곤의

문화와 원칙을 만들어냈다. 세계협동조합연맹의 7대 협동조합 원칙을 뼈대로 노동자 주권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한 몬드라곤만의 10대 원칙을 1987년에 채택했다. 노동자 주권을 명시한 제3원칙과 자본의 도구적·종속적 성격을 천명한 제4원칙, 급여의 연대를 명시한 제6원칙 등이 이채롭다.

몬드라곤에 1인1표 원칙이 처음부터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출자금액이 많거나 직급이 높은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의 투표권 차이가 최대 3대 1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다. 운영경험과 교육훈련이 쌓이면서, 초기 10년이 지나서야 1인1표 원칙을 일반화할 수 있었다.

다만,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과 투표권을 인정하면서(제3원칙), 개별 협동조합에서는 각자 처지에 맞게 다양한 운영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노동금고에서는 신용거래 조합원과 노동자 조합원의 투표권 비율이 3대 1이고, 소비자협동조합인 에로스키에서는 소비자 조합원과 노동자 조합원의 투표권이 5대 5로 맞춰져 있다. 민주적 합의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오랜 과정의 결과이다.

몬드라곤에서는 자본을 노동의 수단이며 노동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한다(제4원칙). 자본은 그것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만큼만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도 연리 최대 7.5%와 물가상승률 등을 포함해 11%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자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금이라 하더라도, 출자금(곧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몬드라곤은 260여개 기업으로 이뤄진 기업 집단인 만큼 노동자 구성이 복잡다기하다. 그래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급여의 연대를 강고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제6원칙). 각 기업별 급여 수준은 90~110% 범위 안에서 맞춰져야 하고, 연간 노동시간 또한 97~103%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최고위층과 최저임금의 급여 격차도 3배 이내로 제한됐다. 1990년대 이후 6배까지 확대됐다.

2. 협동조합 성공의 수수께끼,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기업이 돈을 벌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통상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어설프게 두 가지 가치를 내건 협동조합은 실패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니 사회적 가치니 하는 경제외적인 목적이 수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성공한 협동조합이 생겨나면, 세금감면이나 법률적·정치적 후원과 같은 외생변수의 덕을 봤을 것이라고, 폄하하곤 한다.

흔히 협동조합을 뒤영벌(bumblebee, 호박벌의 일종)에 비유한다. 뉴턴의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몸무게에 비해 날개 길이가 짧은 뒤영벌은 도저기 날 수가 없다. 그런데 잘도 날아다닌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뒤에야 과학자들은 뒤영벌이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뒤영벌의 비행원리를 설명하지 못한 뉴턴 물리학의 한계’에 빗대면서, “경제학 또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성이 유일한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협동조합은 실로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들과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단체이다…협동조합 기업의 지배구조가 난해한 것은 이처럼 시장 코드(market code)와 사회적 코드(social code)라는 이중의 상징코드가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이다…한 가지 코드가 희생당하는 어느 극단의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협동조합의 본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게 된다.”(『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22~23쪽)

이 두개 코드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해 서로 충돌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이다. 자마니는 “그동안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심각한 개념의 혼선이 있었다”고 질타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는 상위의 ‘속’ 아래에 있는

‘종’에 불과하고, 따라서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 다원식의 적자생존 또는 승자독식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기업의 경제적 행동은 자본주의 기업과 다른 동기로 작동하며, 그 나름의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진실’을 일깨운다.

경쟁(competi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com petere’로, 공동의 목표를 함께 지향한다는 뜻이다. 내가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남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 전체 소비자가 건강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자마니는 협동조합들이 벌이는 경쟁을 라틴어의 원래 취지에 가까운 ‘경쟁적 협력’이라 일컫고, 적자생존식 자본주의 기업의 적자생존식 경쟁 형태를 지위 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이라고 이름 붙인다. 지위 경쟁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모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나, 경쟁적 협력은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한다.

3. 협동조합의 탄생과 속성: 노동이 자본을 지배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같은 자본주의 기업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19세기 산업혁명기에 태어났다. 당시 자본가들은 노동과 토지 등 다른 모든 생산요소와 계약을 맺고, 최소의 대가를 지불한 뒤 남은 이익을 자본의 보상으로 독식했다. 그 이전의 중세 도시에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던 상부상조의 사회적 연대 또한 이때에 무너졌다.

그러자 단순한 빈민자선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을 희생시키는 강력한 자본의 힘에 맞서는 두갈래 반작용이 일어났다. 공장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조직운동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이 참여해 운영하는 기업을 스스로 힘을 합쳐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본이 아닌 바로 노동자 또는 시민 자신이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의 태동이었다.

“자본주의 기업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시장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이윤을 모두 차지한다. 반면, 협동조합의 노동은 자본을 고용해 시장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이윤을 모두 차지한다.”(19세기 영국의 협동조합가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협동조합의 민주적 속성을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세계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원칙 해설에서도 “(협동조합에서) 자본은 노동의 하인”이라는 로버트 오언의 말을 인용한다. 프랑스의 샤를 지드 또한 “협동조합의 속성은 자본을 없애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진정한 기능을 노동이 이용하는 도구로 한정시키고 그만큼 대가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존 스튜어트 밀은 협동조합이 미래의 지배적인 조직형태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 “인류가 영속적으로 발전한다면, 결국 가장 지배적인 결사의 형태는 우두머리인 자본가와 경영의 발언권이 없는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식은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평등한 조건으로 결사를 맺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을 공유하며 자신이 선출하고 쫓아낼 수 있는 관리자 아래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마샬 또한 자신의 에세이 ‘협동조합’에서 아주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에서 억눌렸던 근면하고 훌륭한 작업능력이 어머어마한 힘으로 분출한다.” 마샬은 “세계사에서 가장 황폐하게 버려진 상품은 바로 대다수 노동계급이 지닌 최고 수준의 작업능력”이라는 문장도 남겼다.

4. 협동조합의 목적: 공동선과 전체선의 차이

협동조합 기업과 자본주의 기업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벌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사한 점이 많다.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은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전체선(total good)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협동조합 기업은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한다.

공동선과 전체선의 극명한 차이는 흔히 곱셈과 덧셈의 비유로 설명된다. 전

체선은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을 모두 더한 것이고, 공동선은 각각의 선을 모두 곱한 것에 해당한다. 전체선에서는 한두 사람의 후생이 0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후생을 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된다. 덧셈의 결과가 양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곱셈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진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0이 되면, 전체 곱셈의 결과가 0이 되고 만다.

다르게 말하면, 공동선의 원리에서는 한쪽을 희생하고 다른 쪽을 더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희생의 결과가 아무리 전체 후생을 크게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희생당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린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고하게 깔려있는 것이다.

반면에 전체선의 원리는,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과 그대로 연결된다. 전체선에서는 효용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 얼굴과 개성이 없는 존재여서 쉽게 더해지거나 비교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선의 논리는 중세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한 뒤로, 공동선의 논리가 전체선의 논리, 즉 ‘이윤 동기’로 확실히 대체돼 갔던 것이다. 오로지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한 가지에 생산활동의 목표가 맞춰지면서, 자본의 공급자와 노동의 공급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마침내 ‘사람을 희생하는 생산이라는 원리’가 확립됐던 것이다.

공동선과 전체선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전체선 방식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이 유일한 기업 형태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를 수 있다. 말하자면, 기업가란 이윤 동기에 매이지 않고도 공동선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자본주의 기업에도 협동조합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5. 야누스 협동조합의 한계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협동조합은 기업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경제위기에는 안전하고 강하지만, 거꾸로 경제 활황기에는 더딘 민주적 의사결정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체 조합원의 연대를 위해 고위층의 급여를 제한하니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자본조달의 한계이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니, 기업평가와 대출심사에서 불리하고 은행 창구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식 상장을 하지 않으니, 직접 자본을 조달할 길 또한 막혀 있다. 네덜란드의 라보뱅크가 티끌 모아 태산으로 300억 유로의 내부적립금을 쌓았다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116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러한 협동조합 비판은 결국 ‘사업은 사업일 뿐’이고, 모든 경제 주체는 오로지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경제적 인간일 뿐’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실제로 20세기 들어 세계의 경제학계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과 생산양식을 분석하는데 매달리느라,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58년이 되어서야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을 비교한 최초의 이론 모델이 미국학자 벤자민 워드에 의해 개발되었을 정도다. 경영학에서는 지금까지도 협동조합 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직이론에서는 ‘사업도 벌이고 민주주의도 놓치지 않는’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모델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모델이 당연히 이상적이고, 그때그때 필요가 생기면 자본주의 경영 방식을 협동조합 기업에 유연하게 조정해 쓰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스테파노 자마니는 이 지점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기업에 맞게 설계된 조직 모형과 경영 규칙을 단순히 협동조합에 이식하는데 그친다면, 결국 협동조합의 이중적 정체성을 갉아먹고 종래에는 협동조합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중 코드에 맞게 잘 설계된 탄탄한 조직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몸에 맞는 지배구조와 자본조달, 경영 규칙을 누구도 개발하지 않았으며, 그 자연스런 결과로 협동조합 기업들이 부당한 평가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협동조합에 적합한 민주적 지배구조와 연대의 급여 원칙을 정립한 유럽의 선진 협동조합 사례들은 오히려 예외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몬드라곤과 라보뱅크는 오랜 세월 주류 경제의 편견과 투쟁하고 조합들 간의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가까스로 지금의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실제의 선택 상황이 주어진다면, 공정성과 호혜, 자유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협동조합 기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마니는 믿고 있다.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익명의 비인격적 작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본주의 기업을 선택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마리아 엘레나 차베스 협동조합국장은 “협동조합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들이 일반 주식회사와 동등한 차원에서 정부 지원도 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학자들 사이에는 협동조합의 출자 지분을 별도로 거래하는 ‘협동조합 증권거래소’ 개설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6.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성공의 조건

협동조합 기업을 지탱하는 호혜의 작동원리는 이렇다. 나는 너를 위해 어떤 것을 주거나 행하고,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쩌면 나를 위해 나누고 행할 수 있다. 반면 자본주의 기업에서 작동하는 등가물의 원칙은,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고 대신 너는 가치가 동일한 다른 무엇을 나에게 준다는 것이다. 호혜의 원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순수한 이타주의와도 다르다.

“협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흔히 ‘시장의 실패’와 ‘정부

의 실패'를 치료하는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초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작업을 이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시장의 논리로도 정부의 논리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이를 치료하는 지속적인 처방으로 협동조합을 동원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시장이 이상형에 가까워지고, 정부가 관료주의와 부패를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면,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호혜의 작동원리를 강조하는 협동조합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협동조합은 가장 적극적인 자유, 곧 '무엇을 할 자유(freedom to)'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협동조합이야말로 노동을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가장 선진적인 기업형태라는 것이다. “노동은 상품생산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인간 개성을 생산하는 수단이라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 투입재”(알프레드 마샬)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919년 출범 때부터 협동조합국을 설치하고 협동조합 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참모습을 일찌감치 통찰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엘레나 차베스 협동조합국장은 “세계의 협동조합은 1억개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주고,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윤리적 일자리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에서는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의 부를 재분배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사회적 도움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개인이나 집단 누구나 경제적 게임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와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통합의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민주적으로 실천되는, 적극적으로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잘 구현되는 현장인 것이다.

스테파노 자마니는 협동조합 기업이 자본주의 기업과 맞서는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가 교육이다. 사적 이윤동기와 등가물 교환에 따르지 않는 경제적 행동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업이윤이 병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고정관념을 깨도록, 어릴 때부터 열린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자의 등장이다. 더많은 소비자들이 주권자가 되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할수록, 협동조합의 지평은 그만큼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이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만을 선호하는 기존의 경제적·제도적 질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역행한다. 우리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어려운 첫걸음을 겨우 뗐다. 이제 시작이다.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스기모토 타카시 (간사이 대학 상학부 교수)

들어가며

협동조합이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론의 기본 중 가장 기본이며, 민주적이지 않은 협동조합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성별과 연령, 집안과 재산, 출자금의 액수 등에 좌우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라는 테마로 종종 연구회가 열리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논문이 집필되는 것은 왜일까. 이는 1인1표제라는 제도만으로는 협동조합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1인1표제 임에도 왜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 협동조합 민주주의론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인1표제는 협동조합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닌, 여기서부터 논의와 실천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1인1표제에 근거한 협동조합 민주주의가 어떠한 과제에 직면하였고 어떻게 해결을 모색해 왔는지를 짚어보겠다. ‘일본형 생협’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협동조합 원칙에 충실한 조직 만들기과 사업전개, 운동 추진에 성공한 것이 일본 생협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점에서는 다양한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일본 생협의 민주주의를 고찰하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에도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1.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반(班)조직

제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 후반까지 일본 생협의 최대 특징은 누가 뭐래도 ‘반(班)’ 조직의 존재일 것이다. Han(반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말이 전 세계의 협동조합 관계자와 연구자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이유는, 이 ‘반’이라는 시스템이 생협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아시아적, 공동체적인 구조로 유럽과 미국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존재로 비친 점,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생협이 이상으로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실현할 수 없었던 조합원 중심의, 그리고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사업과 운동에 참여하는 생협을 만드는데 일본 생협이 ‘반’을 활용하여 멋지게 성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생협이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을 중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 외적인 요인이 크다. 전쟁 전의 산업협동조합법을 대신하여 ‘소비생활협동조합법’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 1948년 7월 5일인데,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은 철저히 수정되어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에게 아주 엄격한 내용의 법률이 되어버렸다. 생협의 사업구역은 하나의 도도부현 내에 제한되어 대규모화가 금지되었고¹ 신용사업(은행업무)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² 그리고 비조합원이 생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었다.³ 이 ‘비조합원 이용 규제’에 의해 조합원을

1 ‘제 5조 조합은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어 이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직장(職域)에 의한 생활협동조합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거나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제 10조 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하나. 조합원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생산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

둘. 조합원 생활에 유용한 협동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제 6호 및 제7호의 사업은 제외)

셋. 조합원 생활의 개선 및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넷. 조합원 생활의 공제를 도모하는 사업.

다섯. 조합원 및 조합 종업원의 조합 사업에 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여섯.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에 관한 사업.

일곱. 고령자,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조합원이 이용 하는 것.

여덟.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현재 개정된 생협법은 위와 같지만 이 가운데 의료 사업과 복지 사업은 생협법 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제12조 조합원은 그 뜻에 반하여 조합 사업을 강제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

2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과 동일 세대에 속한 자는 조합 사업 이용에 관해 이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3 조합은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이하생략)’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후 일본 생협이며, 사업 구역이 하나의 현 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협은 지역에 밀착된 사업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사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조합원을 확대하여 출자금과 이용금액을 늘리는 것 밖에는 자금을 확보 할 수단이 없었다. 생협법 규제는 국회의원들이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명백하게 지나친 규제였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합원 중심의, 착실하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구매 사업 중심의 생협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던 전국의 생협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생협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는 동시에⁴ 규제 범위 안에서 발전의 경로를 모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반’ 조직이다.

전후 일본에서 생협을 설립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안내서로 애용하던 책이 있다. 시사통신사에서 1949년에 발행하고 협동조합연구소가 엮은 『생활협동조합편람』이라는 책으로, 이 책에는 지역 조합원이 모인 반을 만들어 생협을 견고한 조합원 조직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실천하여 순조로운 성적을 거둔 곳이 야마가타현의 쓰루오카(鶴岡)생협이다. 전국의 생협 관계자들은 쓰루오카 생협의 실천과 『생활협동조합편람』을 참고로 하면서 각지에서 반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총회에서 ‘반은 생협 운동의 기초 조직’이라고 확인하였다. 이후 일본의 지역생협들은 지역의 조합원 수명에서 수십 명 정도가 모이는 반을 기초 조직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한 조직 만들기를 진행해 나갔다.

이 뿐이라면 생협의 ‘반’이 세계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의 관계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성공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 이 반에 또 한 가지의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공동구입’라는 생협의 독특한 무점포판매업태의 도입이다.

1970년대 이전의 생협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마련하여 매장에서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공급하였다. 그 밖에도 ‘고요키키(御用聞

⁴ 개정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이 생협법은 60년 가까이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59년 만의 대개정이라는 2007년 개정생협법에서도 비조합원이용 규제는 기본적으로 계속되었고 현(県) 경계 규제는 이웃 현까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으며 신용사업은 아직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츠)라 하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주문을 받고 물품을 배송하는 업태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일본의 상업 관습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특별히 생협 독자의 업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1970년, 생활클럽생협, 시즈오카(静岡)생협, 센리야마(千里山)생협이 거의 동시에 새로운 생협 독자의 업태를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반 별 공동구입이라는 새로운 업태 시스템은 반 별로 나누어진 조합원에게 미리 예약주문을 받고 주 1회, 그 주문품을 반으로 가져다주는 정기적인 무점포 판매이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지금까지 생협이 조직 만들기를 위해 만들어 온 반을 주문과 공급 단위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생활협동조합의 중심 사업인 구매사업에서 조합원의 협동을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공급된 물품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 소비자 의식을 높이고 반에서의 결속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생협은 조합원 가정에 일일이 공급하지 않고 10명 가까이 되는 반까지만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다. 생협이 팔고 싶은 물품을 홍보·선전하거나, 개발한 물품에 대한 평판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조합원이 모인 반을 단위로 하여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었다. 반은 공동구입과 연결됨으로써 일본 생협을 세계에서 단연 강력한 조합원의 사업체로 길러냈다.

지역 생협의 조합원이 된 여성들은 1주일에 한 번, 반에서 한꺼번에 생협에 주문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주,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으로 반에서 주문한 물품을 가져다주면 반의 조합원은 전원 그 곳에 모여 직원과 다른 조합원과 잡담을 하면서 반 단위로 공급된 물품을 나누어 자신이 주문한 물품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육아 문제, 교육 문제, 물가 문제, 식품첨가물 문제, 공해문제 등 다양한 화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배운다. 때로는 생협 직원에게 생협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나 요구를 전달하기도 하고, 반대로 생협에서는 반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동 상의 요청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일본 생협은 지역의 풀뿌리에서 견고한 조합원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사업 면이나 운동 면에서 반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 일본의 생협은 바로 조합원 참가형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2. 도시에서 ‘반’의 붕괴와 개별공급의 성장

무점포공동구입이라는 사업과 연결되면서 반은 1970~80년대에 걸쳐 참가형 민주주의의 강력한 기초 조직으로 일본의 지역 생협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였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이는 반대로 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반의 전성기에 일본 생협을 견학한 유럽과 미국의 협동조합 관계자는 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조합원이 스스로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협동조합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칭찬하였지만, 자국의 협동조합 운동에 이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웃 사람들과 물품을 같이 구입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주문한 물품이 반으로 공급되었을 때 부재 중인 소비자는 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반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구입이 성립하려면 물품의 프라이버시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야 하고 주 1회 공급되었을 때 반드시 주부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일본 특유의 상황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일본은 예외적으로 남녀의 역할 분업이 확실히 나누어진 나라로,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전업주부’라 하여 가사와 육아만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존재했다. 지역 생협이 만들어 낸 공동구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 전업주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확연히 증명된 것은 1990년대에 일본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시작하고 전업주부라는 존재가 일본에서도 소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전업주부에 의해 지탱되어 왔던 공동구매와 반이 특히 도시에서 위기상황에 빠지면서 반으로 이루어졌던 생협의 조합원 활동까지도 재정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생협에서 반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조직되고 활동

선전 및 동원에서 반에 많이 의지하였기 때문에, 반원이 감소하고 해산하면서 사업뿐만 아니라 운동까지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반이라는 각 지역에 밀착한 조직이 없다면 생협의 구심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버린다. 반이 공동구입이라는 사업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이 후퇴기에 들어간 1990년대 이후, 많은 지역에서 생협은 운동 면에서도 침체·후퇴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사업 면에서는 많은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게 된 반별 공동구입 대신에 ‘개별공급’이라는 새로운 무점포업태가 개발되어 조합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개별공급은 반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조합원이 주문하고 물품을 수취하는 무점포업태이다. 개별공급의 경우에는 집을 많이 비우게 되는 맞벌이 가정이라도 택배 박스 등을 활용하여 개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문 시나 공급된 물품을 반에서 나누면서 자신이 주문한 물품을 이웃이 알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공급은 남녀공동참가와 개인주의가 진행된 사회에 맞는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으나 대신 공동구입의 반과 같은 조합원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의 시대와는 다르게 개별공급의 시대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참가형 민주주의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조합원의 다양화와 조합원 의식의 다양화

공동구입의 시대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이전과 개별공급의 시대라 할 수 있는 현재는 조합원과 조합원 의식이라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다.

예전 생협 조합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력이나 연간 수입은 일반 국민보다 비교적 높고, 소비자의식이 높아 먹을거리의 ‘안심·안전’을 추구하여 생협에 가입한 육아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 여성. 물론 조합원 개인으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만, 90년대 이전에는 전형적인 조합원의 평균상이 그러했다.⁵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합원이 생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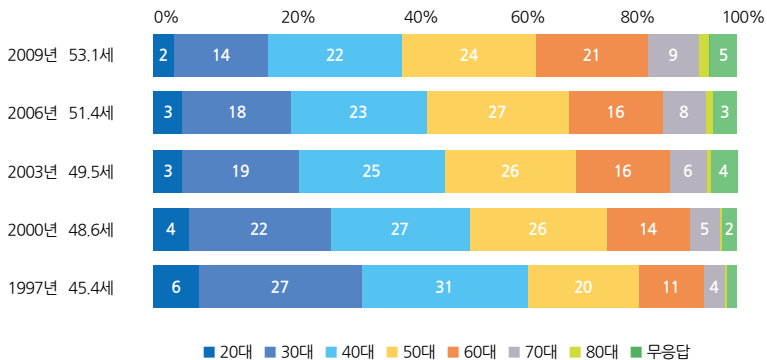
⁵ 野村 秀和, 生田 靖, 川口 清史 역음 『전환기의 생활협동조합』(大月書店, 1986년) 野村 秀和 역음 『생협 21세기로의 도전-일본형모델 실험』(大月書店, 1992년)

절대적인 다수파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일본 지역 생협의 조직률은 35.2%에 달한다. 3세대 중 1세대 이상이 지역 생협 조합원으로 이 정도까지 생협이 보급된 것은 옛날과는 다른 사람들이 상당수 조합원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연간 수입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요 지역 생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전국생협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생협 조합원에게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보인다.⁶

2009년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협 조합원 평균 연령은 53.1세로 1997년의 45.4세보다 8세 정도 상승하였다. 97년 시점에서는 20대와 30대의 조합원이 30% 이상이었는데 현재 16%로 반 정도 줄어들었다. 가족 구성에서도 ‘부부와 아이’ 세대가 50%를 밀돌고 있어 육아 중이며 먹을거리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라는 생협 조합원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표1)

<표 1> 생협조합원의 평균연령과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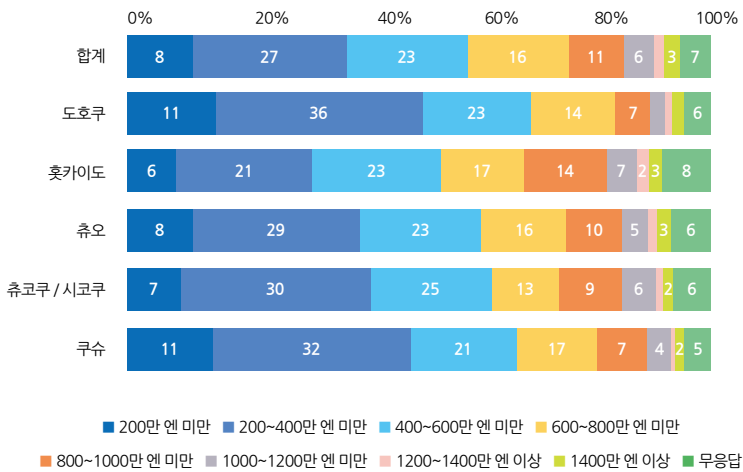
출처: 『2009년도 전국 조합원 의식 조사 보고서』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09년

세대 연간 수입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1997년 조사에서는 18%에 불과했던 부부 연간 수입 400만 엔 이하의 조합원이 2003년에는 26%, 2006년에는

⁶ 『2009년도 전국 조합원 의식 조사 보고서』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09년.

31%,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9년 조사에서는 35%로 3분의1을 넘어섰다. 특히 홋카이도와 큐슈 같은 지방에서는 50%에 가까운 조합원이 부부 연간 수입 400만 엔 이하라고 답하여,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소비자라는 기존의 생협 조합원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이 상당수 생협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2)

<표 2> 생협 조합원 부부의 연간 수입



출처: 『2009년도 전국 조합원 의식 조사 보고서』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09년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전 조합원과 현재의 생협 조합원 사이에 생협과 소비 생활에 대한 의식과 사고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 자명하다. 생협의 이미지를 물으면 4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1위가 ‘안심’, 2위가 ‘안전’인데 20대에서는 ‘편리’가 1위, 30대에서도 ‘편리’가 2위로 젊은 조합원 층에서는 개별공급의 편리성을 생협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슈퍼마켓 등 유통업자의 수준이 높아져 생협에서 이제는 ‘안전·안심’만으로는 절대적인 우위성이 없어지고 그 이외의 것을 생협에 요구하는 소비자가 서서히 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로 이는 조합원의 구체적인 소비행동에도 반영된다.

생협 조합원에게 식품 종류 별로 어디서 가장 많이 물품을 구매하는지 물어

봤을 때 생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던 식품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9년 조사에서는 2품목뿐이었다. 게다가 그 품목이 쌀과 냉동식품이었다. 왜 쌀을 생협에서 구입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슈퍼에서 쌀을 사면 무거운 것을 집까지 가져와야 하는데 생협이라면 집까지 공급해준다는 편리성 때문일 것이다. 또한 냉동식품이 왜 생협에서 인기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냉동품을 배달해 준다는 편리성과 종종 냉동식품을 생협 매장에서 특가 제품으로 저렴하게 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생협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매행위에서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런 현실 속에서 생협은 앞으로의 존재방식, 조합원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90년대 이후 수차례 식품관련 불상사에 휘말렸지만 일본생협이 만들어 온 ‘안심·안전’의 이미지와 이를 보증하는 시스템은 현재도 나름대로 견고하며 조합원이 생협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대가 아직도 안심·안전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조합원 의식과 행동이 점점 더 크게 눈에 띄게 된 것도 사실이다. ‘반의 시대’ 이후 ‘개별공급의 시대’에 생협에서 참가형 민주주의는 이처럼 다양해진 조합원의 생활과 의식에 대응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반’이라는 의지할 곳이 없어진 지금, 어떻게 이 참가형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4. 사업연합 시대의 조합원 민주주의

생협에서 참가형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데, 바로 ‘사업연합회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의 도래다.

생협법의 규제에 따라 전후 일본의 생협에서는 현 경계를 넘어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규제는 유통업이 대규모화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형 체인점이 대두하자 생협에게 아주 불리한 족쇄가 된다. 물품 매입 양을 보아도 전국 규모의 체인점과 현 내에서만 운영하는 생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가격 면

에서도 생협의 매입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지의 생협은 생협법의 틀 안에서 이 규제를 극복할 수단으로 ‘사업연합’을 결성하여 이 사업연합에 물품 매입과 매장 또는 무점포판매 시스템 개발·관리 등을 맡기게 된다.

예를 들면 코프 도쿄, 사이타마 코프, 치바 코프 등이 가맹한 코프네트사업연합은 일본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관동지방의 생협 사업연합인데, 각 도현(都県)에서는 각각의 생협이 계속해서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기능의 대부분은 코프네트사업연합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 소속 생협의 조합원은 형식적으로는 각각 다른 생협의 조합원이지만, 어느 생협 조합이라도 공급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동일 가격의 동일 물품이며 무점포 판매 카탈로그나 새롭게 오픈한 매장의 구조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생협이든 차이가 없다. 이처럼 사업의 모든 면에서 코프네트사업연합의 규격에 통일되는 것에 의해 1도 7현에 걸쳐 380만 명이라는 거대한 생협조합원 집단은 전국 체인점에 지지 않는 가격과 다양하게 구비된 물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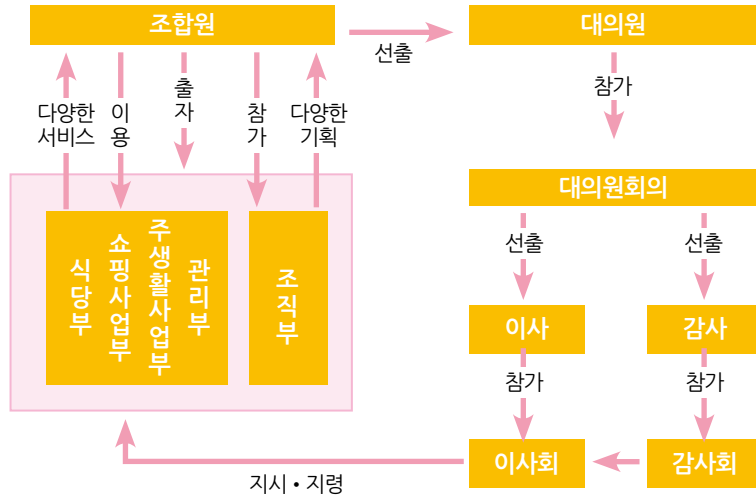
사업연합으로 사업을 통합한 것은 각각의 생협이 가진 특색과 고집(예를 들어 각 현 특유의 식문화에 대한 고집)을 소홀히 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각 생협과 각 지역에 따라 사업연합으로 권한 이양이나 사업통합의 정도에 다양한 차이가 생기고 있다. 관동 지역의 코프네트사업연합처럼 전면적인 사업통합을 지향하는 사업연합도 있지만, 관서지역의 대형 생협이 참가하는 코프긴키사업연합처럼 각 생협의 주체성을 상당 부분 남기면서 부분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연합도 있다. 생협 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려하여 사업연합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와 별개로 조합원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겠다. 사업연합시대의 도래는 생협에게는 민주주의적 운영의 실천을 점점 더 곤란하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연합 시대 이전 생협 민주주의의 첫 번째 과제는 조합원의 의견을 얼마나 흡수하고 이를 사업과 운동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

째 과제는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합원 자신이 참가하는 사업과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생협이 대규모화 할수록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각 지역 생협은 정관상의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총회 이외에도, 지구별 대의원 간담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의원 총회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조합원에 밀착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한마디 카드(건의 사항이나 의견을 적는 종이)’등의 명칭으로 조합원에게 생협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듣고 이에 최대한 대응하는 체제 만들기를, 선진적인 실천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 치바 코프나 코프 미야자키에게서 배워 추진하였다. <표 3>은 지역 생협이 아닌 대학 생협이 내걸고 있는 조직도인데 이 표는 조합원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어딘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는 것이 생협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히로시마 대학생협 조직도



출처: <http://www.hucoop.jp/coop/outline.html>

그런데 사업연합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사업연합이 대부분의 사업을 관할해 나갈 경우 각 단위 생협에서 조합원 민

주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연합의 조직 체제 안에서 조합원 민주주의가 기능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는 지금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어 각 단위 생협에서는 조합원은 당연히 대의원총회에서 1인1표의 결의권을 가지고 있지만(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도 대의원 선출 투표권을 가진다) 사업연합 운영에서는 어느 사업연합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리기업인 주식회사에서는 출자자라면 누구나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영리·협동’의 민주적 기업인 생협에서는 대부분의 생협이 ‘대의원총회’ 제도를 채택⁷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자(조합원)라도 대의원이 아닌 이상 의사결정회의(대의원총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생협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확실히 일본 생협의 민주적 구조상의 결점이라 할 수 있고, 열린 출자자의 회의냐 아니냐는 점에서는 1주1표제로 민주적이지 않다고는 해도 주주총회 쪽이 생협 대의원총회보다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생협에서도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 예를 들면 자유참가제의 조합원 총회를 도입할 수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이 대의원총회와 관련된 과제뿐만 아니라 대의원총회 훨씬 위에 사업연합이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생협 민주주의의 과제로 추가된다. 이는 조합원에게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권력을 가진 집행 기관이 탄생하였다는 것이며, 일반 조합원의 손에 닿지 않는 시스템이 생협에서 또 하나 늘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연합 내부에서 조합원 주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개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거버넌스 상에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기관을 마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7조 오백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하는 조합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총회 대신 대의원 회의를 열 수 있다’

2 대의원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중에 이를 선거한다.

3 종대의 정수는 선거시의 조합원 총 인원의 10분의1(조합원 총 인원이 천 명을 넘는 조합에서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한다.(이하생략)

인터넷으로 전국 생협이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해당 생협의 조직도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대학생협이나 직장생협 등 소규모 생협의 조직도에서는 <표 3>의 예와 같이 조합원에서 출발하는 조직도를 많이 볼 수 있다. 조합원 조직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대규모 지역 생협이 내거는 조직도는 조합원과 대의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조직도가 여기저기에서 보인다.(하물며 이러한 생협이 결성한 사업연합 조직도에는 당연히 조합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조합원 조직을 자칭하는 생협의 조직도로서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표 작성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생협의 모습이 표에 반영된 것인지, 각 생협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⁸

2007년의 생협법 개정으로 이웃 현까지의 사업 전개가 드디어 인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연합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닌 ‘인접한 복수의 생협이 합병한다’는 선택지가 몇 개의 대규모 생협에서 검토되고 있다. 합병에 의한 대형화이든 사업연합에 의한 이중권력화이든 모두 조합원 민주주의에 큰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사업상의 효율만이 아닌 어느 쪽이 조합원의 참가형 민주주의에 걸 맞는 정책인가 라는 관점에서 합병문제와 사업연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⁹

5. 산업민주주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민주주의,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

이 글에서는 생협 민주주의를 조합원 민주주의로 논하였는데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란 조합원 민주주의로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앞으로 협동조합에 중요한 것은 19세기의 협동조합 운동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면서 20세기 협동조합 운동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던 ‘산업 민주주의’ 문제이다.

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구조를 설명하는 조직도에 관료와 관청만 기재하고 국민과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일본이 이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⁹ 사업연합 등 단위 협동조합이 조직하는 이차조직에서 협동조합 민주주의와 조합원 참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杉本貴志의 「협동조합의 이차조직과 조합원 참가」(『협동조합 경영연구지 무지개』637호, 2012년 3월)을 참고.

산업 민주주의란 간단히 말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협동조합의 운영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협동조합운동의 성과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직원·종업원·노동자의 민주주의이다. 협동조합 운동의 원래의 취지에서 말하면 협동조합은 이 산업 민주제를 더 열심히 추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남부파와 북부파의 대립, 시드니 웹브(Sidny Webb)의 산업조합에 대한 비판,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개인 조합원제 폐지에 의한 노동자 이윤 분배파의 쇠퇴로 인해 이 문제는 100년 가까이 협동조합 운동에서 뒤로 밀려 있었다.¹⁰

하지만 개별공급 시대를 맞이한 일본 생활협동조합은 ‘반’ 배송에 비해 몇 배나 번거로운 공급업무에 대한 인건비 삭감 요구가 커지면서 이른바 대량의 ‘비정규’ 노동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말에서 21세기에 걸쳐 일본에서도 다시 나타난 ‘격차사회’의 근원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기업의 인사·노무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동일한 인사정책을 생협이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산업 민주제의 관점에서 생협 민주주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원과 직원·노동자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를 시야에 넣은 민주주의, 즉 ‘스테이크홀더 민주주의’라는 관점도 1995년 원칙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선언한 협동조합에게 요구되고 있다.

일본 생협의 조합원 참가형 민주주의는 반의 시대일 때 하나의 정점에 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그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 거기서부터 한 발, 두 발, 더 나아간 새로운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방식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번역: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연숙)

감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이은선)

10 자세한 내용은 杉本貴志의 『사회연대조직으로서의 비영리·협동조직(협동조합)』의 재구축 (공모연구시리즈 17, 전국노동자공개협회, 2011년)을 참고.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はじめに

協同組合である限り、その組織は必ず民主主義の原理によって管理・運営されているはずである。これは協同組合論における基本中の基本であって、民主的でない協同組合などというものは原理的にあり得ない。協同組合の組合員は必ず1人が1票の議決権を持っており、それは性や年齢や家柄や財産や出資金の額等々に左右されるものではない。すこしでも協同組合のことを勉強した人間であれば、誰もがこのことをよく理解しているはずであ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協同組合における民主主義」というテーマを掲げて、しばしば研究会が開かれ、レポートが提出され、論文が執筆されるのはなぜなのだろうか。それは、たとえ1人1票制という民主的な議決権制度が設けられていたとしても、それだけでは協同組合民主主義が完璧に機能しているとはいえないからである。むしろ「1人1票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組合員の意思が十分に反映されないのか」を問うのが、協同組合民主主義論の課題であるといえるだろう。1人1票制は、協同組合民主主義がめざすべき目標ではなくて、そこから議論と実践が始まる出発点なのである。

本稿は、戦後日本の生活協同組合を主たる対象として、1人1票制にもとづく協同組合民主主義がいかなる課題に遭遇し、いかに解決を模索したのかを振り返る。「日本型生協」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第2次世界大戦後の日本において、生活協同組合は組合員中心主義を根底に据えたユニークな発展を遂げてきた。ある意味ではもっとも協同組合の原則に忠実な組織づくり、事業展開、運動の推進に成功したのが日本の生協であって、そうした生協であっても、民主主義という点でさまざまな課題が今なお山積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たがって日本の生協における民主主義を考察することは、アジアやヨーロッパにおける生活協同組合運動に対しても、何らかの示唆を与え得るものであろう。

1. 草の根民主主義としての班組織

第2次世界大戦後、20世紀後半の日本における生協の最大の特徴といえば、何といっても「班」組織の存在である。Hanという言葉が世界中の協同組合関係者、研究者に知れ渡るほど有名となったのは、この班というシステムが生協先進国のヨーロッパでは成立しがたい、アジア的、共同体的な仕組みとして欧米の協同組合関係者の目にはきわめてユニークな存在に映ったこと、そしてそれにもかかわらず、欧米の生協が理想としながらもなかなか実現できなかった組合員中心の、そして組合員が積極的に事業と運動に参画する生協づくりに、日本の生協が班を活用することで見事に成功し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ろう。

戦後日本の生協が「組合員中心の協同組合」にこだわり、これをつくりあげてきたのは、実は外的な要因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戦前の産業組合法に代わる「消費生活協同組合法」の法案が国会審議を通過したのは1948年7月5日だが、この国会審議のなかで、法案は徹底的に修正され、消費生活協同組合法は生協にとってきわめて厳しい内容の法律となってしまった。生協の事業区域はひとつの都道府県内に制限され、大規模化することが禁止された¹し、信用事業(銀行業務)を営むことも認められなかった²。そして生協においては、組合員以外のものがその事業を利用することが一切禁止されたのである³。この「員外利用規制」によって、組合員を対象とした事業に特化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が戦後日本の生協であり、単一の県内に区域が制限されたことから、生協は地元に着した事業展開を余儀なくされたし、信用事業もできなかったから、ひたすら組合員を拡大して出資金と利用金額を増やすことしか、資金を得る手立てがなくなったのである。

生協法の規制は、商業者の意向に沿った国会議員による明らかに行き過ぎた規制だったと評価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が、結果的にはこれが、組合員中心の、地道な、地域に愛される購買事業中心の生協をつくりあげたのだと見ることができる。

1950年代、こうした規制に苦しみ、資金難にあえいでいた全国の生協は、何とか生き残ろうと生協法改正運動を進めるとともに⁴、規制の枠内での発展の道を探っていた。そこで注目されたのが、班の組織である。

戦後日本で生協を設立しようとした人々が、ガイドブックとして愛用した書物がある。それは、時事通信社から1949年に刊行された協同組合研究所編『生活協同組合便覧』という本であって、このなかでは地域の組合員が集まる班をつくることで生協を強固な組合員組織にすることが説かれていた。そしてそれを実践して、

好調な成績を収めていたのが、山形県の「鶴岡生協」である。

こうして全国の生協関係者が鶴岡生協の実践と『生活協同組合便覧』の文章・理論に学び、班の組織づくりが各地で展開される。そして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においても、総会において「班は生協の運動上の基礎組織である」と確認されるのである。日本の地域生協は、これ以降、地域の組合員が数名から十数名ほどが集まる班を基礎組織として、これを基底に据えた組織づくりを進めていった。

これだけならば、生協の班は世界の協同組合関係者からそれほど注目される存在とはなら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確かに班をつくることで、日本の多くの生協は地域の組合員を地域単位で組織することに成功したのだが、それを世界の関係者を驚かせるまでに成長させたのは、1970年代になって、この班にもうひとつの要素が加えられたことによる。それは、「共同購入」という生協独特の無店舗販売業態の導入である。

1970年代以前の生協は、他の小売業と同じく、店舗を設けてそこで組合員に物品を販売、供給していた。そのほかに「御用聞き」と呼ばれる、組合員宅を訪問して注文に応じて商品を届けるという業態もあったが、いずれも日本の商慣習をそのまま導入したものであり、とくに生協独自の業態というものは存在しなかった。そこに1970年、生活クラブ生協、静岡生協、千里山生協の3生協がほぼ同時に、新たな生協独自の業態を開発し、導入したのである。

班別の共同購入と呼ばれるその新業態の仕組みは、班ごとに分かれた組合員から、あらかじめ予約注文を受け付け、週に1回、その注文品を班に届けるという定期的な無店舗販売である。

ここでユニークなのは、それまで生協が組織づくりのためにつくってきた班を、注文と配送の単位として活用したことである。こうすれば、生活協同組合の中心的な事業である購買事業において、組合員の協同がはっきりと目に見える形で活用できる。組合員は、届けられた商品の仕分け作業等を通じて、消費者意識を高め、班での結束を強めることができるし、生協にとっては、一軒ずつ組合員宅に配送するのではなく、10名近くの班員が集まる班まで届けることで済むから、コスト的にもきわめて有利である。生協が売り込みたい商品のアピール・宣伝をする上でも、開発した商品の評判などを情報収集するにあたっても、組合員が集まった班を単位とすることで、生協にははかりしれないメリットがもたらされた。班は、共同購入と結びつくことで、日本の生協を世界でも際だって強力な組合員の事業体に育て上げたのである。

地域生協の組合員となった女性たちは、1週間に1度、班でまとめて生協に注文

を出す。そして翌週、職員が運転するトラックで班に注文品が届くから、班員は全員がそこに集まり、職員や他の組合員と世間話をしながら、班ごとにまとめられた商品を仕分けして自分の注文品を受け取るのである。この班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子育ての問題、教育問題、物価問題、食品添加物の問題、公害問題等々、さまざまな話題が話し合われ、組合員は多くのことを学習する。時には生協の職員に対して、生協へのきびしい批判・要求が投げかけられることもあるし、逆に生協の側から、班の組合員に情報が提供されたり、運動上の要請が行われたりすることもしばしばである。

こうして日本の生協は、地域の草の根から強固な組合員組織をつくりあげることができた。事業の上でも、運動の上でも、班を基礎としてものごとが進められる日本の生協は、まさに組合員の参加型民主主義のモデルといえるようなものだった。

2. 都市部における班の崩壊と個配の伸張

無店舗共同購入という事業と結びつくことで、1970年代から80年代にかけて、班は参加型民主主義の強力な基礎組織として日本の地域生協に欠かすことができない存在に成長できたのであるが、1990年代になると、それが逆に班の危機を招くこととなる。

班の全盛時、日本の生協を見学した欧米の協同組合関係者はこれに非常に大きな関心を示し、組合員が自ら事業の一翼を担う協同組合民主主義の模範としてこれを称賛したが、それでは自国の協同組合運動にこれを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質問には、一様に否定的な反応を示していた。そのひとつの理由は、隣近所の人々と買い物をも共同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自国の消費者には馴染ま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あり、もうひとつの理由は、たとえそれを組合員が受け入れたとしても、週に1度、注文したものが班に配送されても、在宅していない消費者はそれ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だった。つまり班を基礎とした共同購入が成立するのは、買い物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ということにそれほど敏感ではなく、週に1度の配送時には必ず主婦が在宅しているという、日本特有の状況があって初めて可能だということである。

先進国のなかで、日本は例外的に男女の役割分業がはっきりとした国であり、80年代まで、日本には「専業主婦」という、家事と子育てだけを担う身分の女性たちが存在していた。地域生協がつくりあげた共同購入というビジネスモデルは、

この専業主婦の存在を前提にしたシステムだったのである。そのことがはっきり示されたのは、1990年代になって、日本の女性たちが本格的に社会進出を始め、専業主婦という存在が日本でも少数の存在となってからのことである。

こうして、専業主婦に支えられた共同購入と班が、とくに都市部において危機的な状態に陥ると、班に支えられていた生協の組合員活動までもが見直しを迫られ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多くの生協では、組合員組織が班を基軸に組織され、組合員活動においても、活動の宣伝や動員において班に多くを頼っていたから、班員が減少したり、班が解散することによって、事業だけでなく運動までもが、大きな危機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班という、それぞれの地域に密着した組織がなければ、生協の求心力は著しく弱体化してしまう。班が共同購入という事業システムと結びついてきたが故に、それが後退期に入った1990年代以降、多くの地域で、生協は運動面でも低迷・後退を余儀なくされたのである。

その後、事業においては、多くの組合員が利用することが困難となった班別共同購入に代えて、「個配」という新しい無店舗業態が開発され、組合員の支持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個配は、班を経ないで直接自宅で組合員個人が注文と商品の受け取りを行うという無店舗業態である。これならば、たとえ留守がちの共働き家庭であっても、宅配ボックス等を活用することで、個配事業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注文の際、あるいは配送された品物を班で仕分ける際に、近所の人々に自分が買い物した品物を知られることもない。

そういう意味では、個配は男女共同参画と個人主義が進んだ社会にふさわしい事業モデルといえるだろうが、そこには共同購入における班のような、組合員民主主義に結びつくようなシステムは存在しない。班の時代とは異なり、個配の時代には、事業とは全く別の次元での参加型民主主義の構築がもとめられるのである。

3. 組合員の多様化と組合員意識の多様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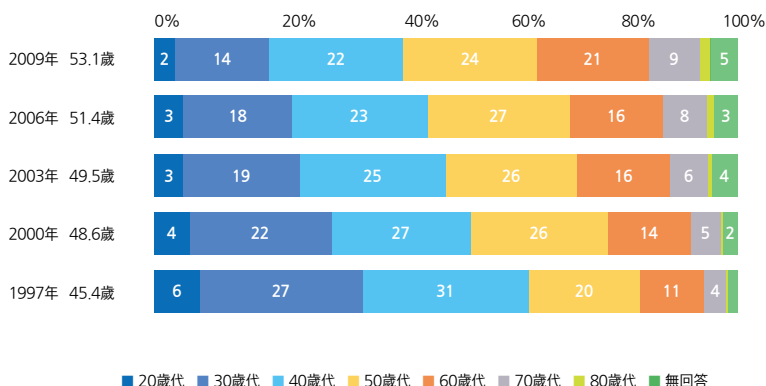
組合員やその意識という点でも、共同購入の時代というべき1990年代以前と、個配の時代というべき現在とで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

かつての生協の組合員は、およそ次のような姿にまとめられる存在だった。学歴においても年収においても一般的な国民に比べて比較的高く、消費者意識が強く、食の「安心・安全」をもとめて生協に加入した、子育てを熱心に行っている最中の女性……。もちろん個々の組合員を見れば、さまざまな人々が集まっているのは

当然であるが、全体像・平均像として、このような典型的な組合員像を90年代以前は多くの地域生協で描く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⁵。しかし、今やこうした組合員は、生協において絶対的な多数派とはいえなくなっている。

現在、日本の地域生協の組織率は35.2%に達している。3世帯に1世帯以上が地域生協の組合員だということであり、ここまで生協が普及したということは、かつての組合員とは異なった組合員が相当多数、生協の組合員と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近年、日本では高齢化や年収の減少が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るが、主要地域生協の組合員を対象に3年に1度程度実施される「全国生協組合員意識調査」の結果を見ると、生協組合員にはその傾向がより顕著に見られるのである⁶。2009年の調査によれば、いまや生協の組合員の平均年齢は53.1歳であり、1997年の45.4歳から8歳ほど上昇している。97年時点では、20歳代と30歳代の組合員が合わせて3割以上いたが、現在それは16%と半減している。家族構成においても「夫婦と子ども」という世帯は5割を切っており、子育て中で食の安全に敏感な消費者という生協組合員のイメージは完全に覆される状態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図1)。

〈図1〉 生協組合員の平均年齢と年齢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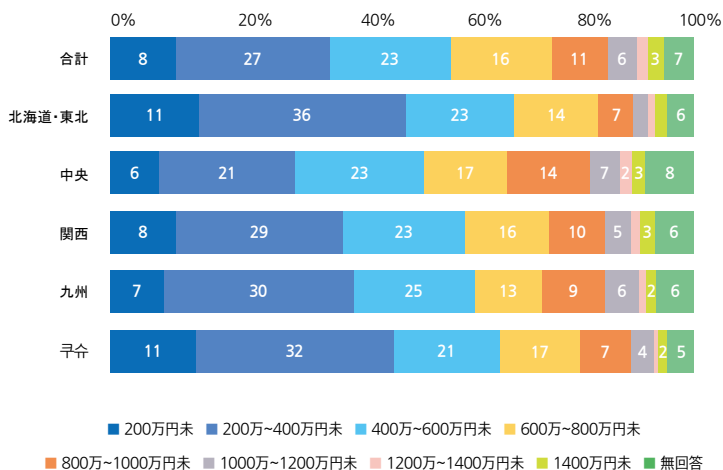


出所:『2009年度全国組合員意識調査報告書』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2009年。

世帯年収も年々減少を続け、1997年の調査では18%しかいなかった夫婦合わせて年収400万円以下という組合員が2003年には26%、2006年には31%、そして最新の2009年の調査では35%と3分の1を超えている。とくに北海道や九州といった地方では、5割近くの組合員が夫婦合わせても年収は400万円以下であると回答

しており、比較的生活に余裕がある消費者という従来の生協組合員像ではとらえきれない人々が相当多数、生協の組合員となっ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図2)。

〈図2〉 生協組合員の夫婦合わせた年収



出所:『2009年度全国組合員意識調査報告書』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2009年

こうした状況では、かつての生協組合員と現在の生協組合員とで、生協や消費生活に対する意識、考え方が相当異なっ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生協のイメージを聞くと、40歳代以上はいずれの年齢層でも1位が「安心」、2位が「安全」となっているが、20歳代では「便利」が1位、30歳代でも「便利」が2位と、若い組合員層では個配の利便性が生協の最大の特徴と捉えられていることがうかがわれる。スーパーマーケット等流通業者の水準が上がり、「安心・安全」だけでは、もはや生協には絶対的な優位性はなく、それ以外のものを生協にもとめる消費者が徐々に増えていくだろうことを暗示する結果であるが、それは組合員の具体的な消費行動にも反映している。

食品の種別に、どこで買い物をすることが最も多いかを生協組合員に尋ねると、生協で買うことが一番多いという食品は年々減少し、2009年の調査ではそれがわずか2品目となってしまった。しかもそれが、米と冷凍食品という結果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なぜ米を生協で購入するかといえば、それはおそらく、スーパーなどで米を買った、重いものを自宅まで持ち帰らなくてはならないが、生協ならば自宅まで届けてくれるという利便性が理由であろう。また冷凍食品でもなぜ生協が人気があるかとい

えば、これも冷凍品を配送してくれるという利便性と、しばしば冷凍食品が生協店舗で安売りの目玉として扱われているから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

「安心・安全」の生協の組合員であっても、実際の購買行動はこのようなものであり、そうした現実から、生協はこれからのあり方、組合員への向き合い方を考え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

90年代以降、数々の食品不祥事に巻き込まれてしまったとはいえ、日本の生協がつくりあげた「安心・安全」のイメージと、それを保証するシステムはそれなりに現在も強固なものであって、組合員が生協に寄せる最大の期待が未だにここにあることも間違いのない事実である。しかし上述のように、それだけでは捉えきれない組合員の意識と行動が徐々に大きく目立つようになっていることもまた事実であって、「班の時代」の後、「個配の時代」の生協における参加型民主主義は、こうした多様化した組合員の生活と意識に対応した民主主義でなくてはならない。班という拠り所に頼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現在、それを築き上げることはいかにして可能となるのだろうか。

4. 事業連合時代の組合員民主主義

さらにもうひとつ、生協における参加型民主主義を困難にする要素が90年代以降に生まれている。それは、「事業連合時代」というべき時代の到来である。

生協法の規制によって、戦後日本の生協には県境を越えて事業活動を営むことが許されなかった。この規制は、流通業の大規模化が進み、全国展開で規模の利益を追求する大手チェーンストアが台頭すると、生協にとってきわめて不利な足枷となってくる。商品の仕入れ量からしても、全国展開をするチェーンストアと、県内だけで営業する生協とでは比較にならない差が生まれてしまう。それは価格等において、生協の仕入れ条件が著しく不利にな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そこで各地の生協は、生協法の枠内でこの規制を克服する手段として「事業連合」を結成し、この事業連合に商品の仕入れや店舗あるいは無店舗販売のシステム開発・管理等を委ねたのである。

たとえば、コープとうきょう、さいたまコープ、ちばコープ等が加盟するコープネット事業連合は、日本で最大規模を誇る関東地方の生協事業連合であるが、それぞれ各都県では生協が独立して存在し続けながら、事業に関わる機能の大半はコープネット事業連合がその役割を引き受けている。したがって、各所属生協の組

合員は、形式的にはそれぞれが別の生協の組合員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どこの生協の組合員であっても、供給されるものの大半は同一価格の同一商品であり、無店舗販売のカatalogも、新しく開店した店舗の構造も、基本的にはどこの生協にも差はない。このように事業のあらゆる面でコープネットの規格に統一されることによって、一都七県にまたがる380万人という巨大な生協組合員の集団は、全国チェーンに負けないような価格と品揃えを享受できている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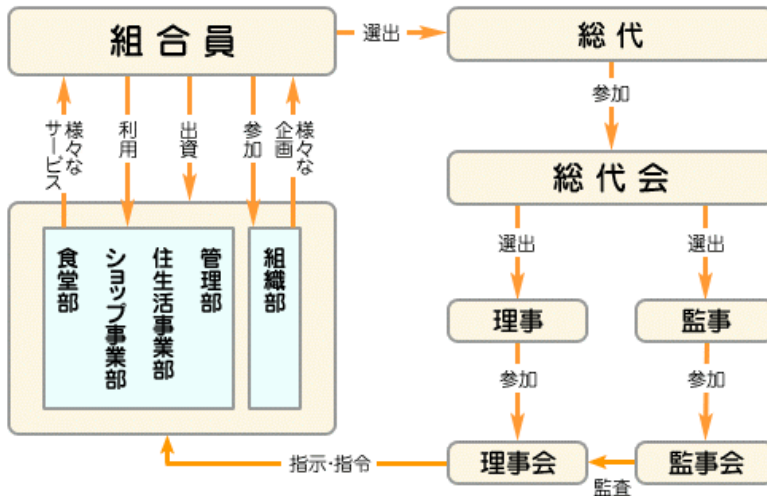
事業連合への事業の統合は、それぞれの生協がもっていた特色やこだわり(たとえば、各県特有の食文化に対するこだわり)を時としてないがしろにする危険を孕むものであり、そこから各生協、各地域によって、事業連合への権限の委譲や事業統合の度合いにバリエーションが生まれている。関東地区のコープネット事業連合のように、全面的な事業の統合をめざす事業連合もあれば、関西地区の大手生協が参加するコープきんき事業連合のように、各生協の主体性をかなりの程度残しつつ部分的な統合を図る事業連合もあり、これからの生協事業のあり方を考える上でも、事業連帯をどう進めるかという問題は今後徹底した議論が必要であろう。しかし本稿では、それとは別に、組合員民主主義という点から、この問題を考察する。事業連合時代の到来は、生協にとって、民主主義的運営の実践をますます困難で複雑なものとしているからである。

事業連合時代以前の生協においては、生協民主主義の第一の課題は、組合員の声をいかに吸い上げ、それを事業と運動に生かすか、であった(そして第二の課題は、組合員から意見を徴収するだけでなく、いかに組合員自身が参加・参画する事業と運動をつくりあげていくか、であった)。生協が大規模化すればするほど、組合員の声を聞くことが困難になることは必然であり、したがって各地域の生協は、定款上の意思決定最高機関である総代会以外に、その開催に先立つ地区別総代懇談会等の会議を開催し、代議制の総代会が形式的なセレモニーになりがちであることを踏まえて、より地域の組合員に密着してその声を聞こ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

さらに日常的にも、「ひとことカード」等の名称で、組合員から生協に関するあらゆる意見・要望を聞き、それにできる限り応える体制づくりを、先進的な取り組みを展開していた、ちばコープやコープみやざきに学んで、進めていたのである。

図3は地域生協ではなく、大学生協が掲げている自生協の組織図であるが、この図にある組合員から出発する矢印がどこかで機能不全に陥っていないか、それをチェックすることが生協民主主義の基本であったといって良いだろう。

〈図3〉 広島大学生協の組織図



出所: <http://www.hucoop.jp/coop/outline.html>

ところが事業連合時代に突入すると、問題はそれだけでは済まなくなる。事業連合が事業のほとんどを取り仕切る場合、各单位生協において組合員民主主義が貫徹していたとしても、それだけでは不十分であり、事業連合の組織体制のなかで組合員民主主義が機能していることが必要となる。しかしそれは現在のところほとんど試みられていないことであって、各单位生協においては、組合員は当然ながら総代会において1人1票の議決権をもっている（総代でない組合員でも総代選出の投票権をもっている）が、事業連合の運営においては、どこの事業連合においても組合員の意思決定への直接的な参加制度は構築されていないのである。

営利企業である株式会社では、出資者は誰でも株主総会に参加して投票する権利を持っているのに、「非営利・協同」の民主的企業であるはずの生協では、ほとんどの生協が「総代会」制を取っている⁷⁾ために、出資者（組合員）であっても、総代にならない限り意思決定会議（総代会）に参加できない、という指摘がこれまで生協がバナンスの問題点としてなされてきた。これは確かに日本の生協における民主的仕組み上の欠点といえるものであり、開かれた出資者の会議となっている

か否かという点では、1株1票制で民主的でないとはいえ、株主総会の方が生協の総代会よりも「開かれ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今後は生協においても、間接民主主義ではなく直接民主主義、たとえば自由参加制の組合員総会等を導入できないか、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そして90年代以降には、この総代会制度の課題に加えて、総代会のさらに上に事業連合という機関が設けられるという問題が生協民主主義の課題に加わったのである。これは、組合員からさらに遠く隔たった場所に、もうひとつの権力をもった執行機関が誕生したという問題であり、一般組合員の手が届かないシステムがまたひとつ生協界に増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事業連合のなかで組合員の主権をどう確保していくか、組合員の声を聞く懇談会の開催というレベルにとどまらず、ガバナンス上に公式に位置づけられる制度・機関を設けるような方向でさまざまな模索をすることが生協にはもと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すると、全国の生協が公開するホームページのなかに、その生協の組織図が掲載されている例が数多く見受けられる。大学生協や職域生協など小規模な生協の組織図においては、図3の例のように、組合員から出発する組織図となっていることが多い。組合員組織としてこれは当然のことだと思われるが、大規模な地域生協が掲げる組織図のなかには、なぜか組合員や総代が全く登場しない組織図が散見される(ましてや、そうした生協が結成する事業連合の組織図には、当然ながら組合員は全く出てこない)。組合員組織を自称する生協の組織図として、このようなことは本来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れが単なる作図上の問題なのか、それとも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生協の姿勢がそこに反映してしまったのか、各生協はあらためて考えてみ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⁸。

2007年の生協法改正によって、隣接県までの展開がようやく生協に認められたことを契機に、「事業連合で連帯する」のではなく、「隣接する複数の生協が合併する」という選択肢がいくつかの大規模生協で検討され始めている。合併による大型化も、事業連合による二重権力化も、どちらも組合員民主主義に大きな課題を投げかけるものである。事業上の効率だけでなく、どちらが組合員の参画型民主主義にふさわしい方策なのかという観点からも、合併問題や事業連帯の問題は検討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⁹。

5. 産業民主主義、ステークホルダー民主主義、コミュニティへの責任

本稿においては、生協の民主主義を組合員の民主主義として論じてきたが、協同組合における民主主義とは、組合員民主主義に限られるものではない。とくにこれからの協同組合にとって重要なのは、19世紀の協同組合運動が最大の課題のひとつとしていながら、20世紀の協同組合運動においてほとんど無視されてきた「産業民主主義」の問題である。

産業民主主義とは、簡単に言えば、協同組合で働く人々の意見を協同組合の運営にいかにかき入れ、協同組合運動の成果をそこで働く労働者がいかに享受するかという、職員・従業員・労働者の民主主義である。協同組合運動のそもそもの主旨からすれば、協同組合はこの産業民主制の追求にもっと熱心であって然るべきだと思われるが、イギリスにおける南部派と北部派の対立や、ウェーブ夫人による生産組合への批判、ICA(国際協同組合同盟)における個人組合員制の廃止による労働者利潤分配派の退場等々によって、この問題は100年近く協同組合運動において棚上げされてきた¹⁰⁾。

しかし、個配の時代を迎えた日本の生活協同組合は、班への配送に比べて数倍の手間がかかる配送業務において、人件費コストの削減に迫られ、大量のいわゆる「非正規」労働者を利用し始めている。90年代末から21世紀にかけて日本にも再び誕生した「格差社会」の根源には、かつてのように正規労働者を雇わず、大量の非正規労働者を使い捨てにしている企業の人事・労務政策があ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それと同じような人事政策を生協が採っているのだとすれば、もう一度、産業民主制の観点からも、生協の民主主義が今どうなっているのか、点検が必要だろう。

さらに組合員や職員・労働者に限らず、もっと広い範囲のステークホルダー(利害関係者)を視野に入れた民主主義、すなわち「ステークホルダー民主主義」という観点も、1995年原則で「コミュニティへの責任」を宣言した協同組合にはもともとめられるだろう。

日本の生協における組合員参画型民主主義は、班の時代にひとつの頂点に達した。いまもとめられているのは、それをただ復活させることではなく、そこからさらに一歩、二歩進んだ新しい協同組合民主主義のあり方を考えることなのである。coop

1「第五条 組合は、都道府県の区域を越えて、これを設立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職域による消費生活協同組合であつてやむを得ない事情のあるもの及び消費生活協同組合連合会（以下「連合会」という。）は、この限りでない。」

2「第十条 組合は、次の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組合員の生活に必要な物資を購入し、これに加工し若しくは加工しないで、又は生産して組合員に供給する事業

二 組合員の生活に有用な協同施設を設置し、組合員に利用させる事業（第六号及び第七号の事業を除く。）

三 組合員の生活の改善及び文化の向上を図る事業

四 組合員の生活の共済を図る事業

五 組合員及び組合従業員の組合事業に関する知識の向上を図る事業

六 組合員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事業

七 高齢者、障害者等の福祉に関する事業であつて組合員に利用させるもの

八 前各号の事業に附帯する事業」

現在の改正された生協法では以上のようにになっているが、このうち医療事業や福祉事業は、生協法制定当時にはあげられていなかったものである。

3「第十二条 組合員は、その意に反して、組合の事業を利用することを強制されない。

2 定款に特に定めのある場合を除くほか、組合員と同一の世帯に属する者は、組合の事業の利用については、これを組合員とみなす。

3 組合は、組合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以下省略）」

4 改正運動は成功することができず、結局この生協法は60年近く、大きな改正がなされなかった。そして59年ぶりの大改正といわれた2007年の改正生協法においても、員外利用規制は基本的に継続され、県境規制は隣県まで緩和されたが依然として残り、信用事業は未だに認められていないのである。

5 野村秀和、生田靖、川口清史編『転換期の生活協同組合』（大月書店、1986年）。野村秀和編『生協21世紀への挑戦－日本型モデルの実験』（大月書店、1992年）。

6『2009年度全国組合員意識調査報告書』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2009年。

7 消費生活協同組合法では、以下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

「第四十七条 五百人以上の組合員を有する組合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総会に代わるべき総代会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2 総代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のうちからこれを選挙する。

3 総代の定数は、その選挙の時における組合員の総数の十分の一（組合員の総数が千人を超える組合にあつては、百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以下省略）」

8 民主主義国家において、国の仕組みを説明する組織図のなかに官僚と役所だけを書き込み、国民や議会については全く取り上げず、わが国はこのような運営されていると説明したとすれば、大問題となるであろう。

9 事業連合など単位協同組合が組織する二次組織において、協同組合民主主義や組合員参加をどう考えればいい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杉本貴志「協同組合の二次組織と組合員参加」(『協同組合経営研究誌にじ』637号、2012年3月)を参照。

10 詳細は、杉本貴志『社会連帯組織としての非営利・協同組織(協同組合)の再構築』(公募研究シリーズ17、全労済協会、2011年)を参照。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가. 1970년대의 상황

1970년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모순들을 풀어가려고 시도했기에 사회 전체가 불안정했다. 저곡가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추진한 산업화는 특혜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속에서 그 위기가 드러나 무수한 부실기업이 출현하였다. 이 위기들을 해결하려고 정부는 외국자본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억압하였다. 1970년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외자기업에서 노동 3권을 제한하고,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노동3권을 봉쇄하였다. 1970년 11월13일 청계천의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사건과 71년 8월10일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 3만여 주민의 폭동 등은 이런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1972년에는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려 ‘8·3조치’가 단행되었다.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라는 이름으로 “8월2일 현재 모든 기업사채의 지불을 동결하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율 월 1.35%)으로 하거나, 기업에 출자하도록” 하였다. 당시 인플레이가 극심한 상황이라 부실을 일으킨 기업주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자본 축적을 위한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다. 71년과 73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석유위기(Oil Shock)는 우리 경제에 주름을 깊게 하였고, 70년대 말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기업 부실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정치상황과 맞물려 80년 초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70년대의 한국경제는 78년까지는 60년대식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72년~76년에는 경제성장률 연평균 11.2%를, 77년 10.3%, 78년 11.6%의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79년에는 6.4%, 80년에는 -5.7%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1971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76년 370달러, 79년 1,597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70년대 제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평균 7.7%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80년에도 월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62.3%였다.

이 시기는 또한 박정희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었던 기간이다. 박정희는 69년 3선 개헌 후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고전하면서 부정 선거로 신승을 했다. 박정희는 7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72년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헌정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유정화)하는 등 장기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박정희는 국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김대중을 73년 일본 동경에서 납치하여 국내로 데려왔다. 이 일을 계기로 학생들의 데모와 민주화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74년 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예상되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를 선포(74년 1월8일)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를 봉쇄하고, 민청학련 사건을 통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긴급조치 4호(74년 4월), 9호(75년 9월)를 잇달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유지시킨 독재정권은 급기야 79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심복 김재규에게 박정희가 살해당하면서 80년대를 맞게 되었다.

나.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협동조합은 자주성, 민주성이 생명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기 혹심한 민중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은 자본의 공세에 맞서며 성장하였다.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이면서 참담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인 열망을 가진 조직이었다.

레이들로 박사는 “협동조합의 중심 목적은 보다 나은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대업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

동조합연맹(ICA)이 제시한 협동조합의 7원칙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결코 건전하게 발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정치권력에 대해 자주성을 지키고,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할 때만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레이들로 박사는 “정부와 너무 긴밀한 관계는 협동조합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일제 말기에 해산당한 후 오랜 공백기를 지나 1960년대에 자주적 협동조합이 부활하여 70년대에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한국은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협동조합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왜곡된 발전을 하였고, 반면 새롭게 자라나던 자주적 협동조합은 정권의 억압으로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스러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2. 70년대 협동조합의 전개과정

가. 협동교육연구원의 역할

한국전쟁 이후 참담한 우리나라 상황을 극복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조가 응급처방을 하였다. 그러나 일회성 원조로 자주적인 회복력을 키우는 힘든 일이었다. ‘한국 국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방법의 하나로 신협을 조직하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실천한 사람이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Sister Mary Gabriella Mulherin, 한국명 가벨)였다. 미국 가톨릭 메리놀회 소속으로 1930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한 가벨 수녀는 1957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신용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귀국하였다. 그녀는 한국에 신협을 소개하고 교육하면서 1960년 부산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조

직하였다. 또 다른 개척자로는 장대익 신부가 있는데, 장신부는 1957년부터 2년 동안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1960년 서울에 ‘가톨릭중앙신협’을 조직하였다.

가벨 수녀는 부산에 있던 협동조합교도봉사회(62년 2월)를 1963년 7월 서울로 이전하였다. ‘협동교육연구원(Cooperative Education Center)’으로 이름을 바꾸고 초대 원장을 맡아 왕성하게 신협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협동교육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민간 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창기 신협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육내용은 신협지도자 등 임직원 교육과, 새로 설립된 지방의 신협들에 직접 가서 신협 조합원 교육과 설립을 지도하였고, 설립 이후에는 임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971년 12월20일 협동교육연구원의 철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2.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3. 우리는 행동을 요구하는 교육주의를 믿는다.
4. 우리는 자조와 협동정신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됨을 믿는다.
5. 우리는 이리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정신적, 물질적 행복을 누리면서 참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1972년에는 제2차 연구원 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는 보건협동조합 조직, 소비자보호운동과 공동구매조합 육성, 주택협동조합과 협동촌 건설, 거제도에 종합적인 농촌사회 건설의 세계적인 모델 설립, 국제적인 협동조합 지도자 양성과 국제교류 적극 추진, 청소년과 여성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택협동조합, 협동촌 건설, 국제적 협동조합지도자 육성, 청소년과 여성교육 강화 등의 과제는 아

직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들인데 40년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10개년 계획의 6번째 과제인 ‘거제도 농장’은 72년 8월15일 거제도 지세포 연안에 농촌개발교육을 위한 농장(1만5천 평)으로 개장되었다. 1970년 주민들을 교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야산개발, 가축사육, 양어장개발 등의 연구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원의 재정지원도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로 한정하였다. 아쉬운 것은 이 농장에 대한 기록이 75년 이후에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 협동교육연구원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행하고 교육장을 빌려주는 등 협동조합운동 전반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대전시 유성구에 신협 중앙연수원이 준공되면서 연구원은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협동조합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신협과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배양기(incubator) 역할을 하고 지원하는 등 커다란 족적을 남긴 연구원은, 신협 등 협동조합들이 자체 교육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그 역사적인 소임을 마치게 된 것이다.

나. 농촌의 신협운동과 공동구매조합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농촌지역은 농자재와 생활물자를 구입하려면 보통 5일장에 나가서 농산물을 팔아 필요한 물품을 사왔으나 당시의 농어촌, 광산촌 등은 물가가 비싸고 고리채(연리 50%)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영세한 농어민, 광산촌 노동자, 도시영세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협은 1972년 신협법 제정으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대에 신협은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비싼 물가에 시달리던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사업을 넘어서 경제 사업까지 확장하였다. 특히 1973년 12월31일 “신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사업(공동구매, 판매, 공동이용업무)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신협 주도하에 공동구매 사업이 시작되었고, 일부는 소비자협동조합(이하 소협)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업을 실시하는 신탁이 200여개가 되었지만 1979년부터 정부가 신탁의 경제사업을 억제함에 따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다. 민주노동운동과 협동조합

한국노총이 대표하던 한국의 노동조합은 71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72년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급격히 무력화되었다. 한국노총 등은 7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10월 유신에 대해 “구국통일을 위한 영단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70년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소수의 민주노조와 개신교의 산업선교회, 가톨릭의 노동청년회(J.O.C.), 크리스천아카데미 등에 의해 유지되면서 모진 탄압을 당하였다. 정권에 굴종하던 한국노총의 일부 사업장에서 신탁과 공동구매조합, 구판장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반노동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도움이 되었지만 노동조합이 어용화 되면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키기는 힘들었다. 이런 조합들은 어용노조 지도부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민주노동운동 진영에서 가장 일찍 협동조합을 조직한 것은 영등포산업선교회(1958년 출범)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1969년 8월11일, 회원 50여 명이 14,000여 원을 모아 신탁을 창립하였다. 실무자는 미리 협동교육연구원에서 1개월간의 교육을 받았다. 1972년 신탁법이 제정되면서 ‘영등포산업개발신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재무부에서 제 1호로 인가를 받았다.

신탁을 창립한 목적은 1) 신탁조합이란 경제적인 조직을 통해서 산업선교를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2) 뜻밖의 어려운 재난을 당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3) 저임금으로 항상 목돈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목돈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안정성 있는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4) 적은 돈을 서로 협력해서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목적이 ‘산업선교를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신탁은 산업선교 활동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협동교육원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신탁 등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자들은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긴급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산업선교회에 가면 습관적으로…주머니나 가방에서 동전을 몽땅 꺼내어 통장과 함께 내밀었다”(박점순)는 증언처럼 신협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돈을 잘 쓰는 경제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1976년에는 조합원 965명, 3,550만원의 자금으로 연간 연인원 2,133명의 조합원에게 대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협은 1978년 정권의 탄압으로 해산하게 된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어용노조 민주화하기, 퇴직금 받기, 잔업이나 특근 수당 받기, 공장에서 강제예배를 못하게 하기, 8시간노동 쟁취하기 등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런 운동은 한국노총이 무력화된 70년대 내내 계속되었고 정권은 이를 지속적으로 탄압하였다. 1978년 정부가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담당 목사 구속, 호주 선교사 추방,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의 탄압을 하면서 재무부에서 신협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의 신상을 노출시킬 수 없어 신협은 이를 거부하였고 재무부는 그를 빌미로 인가취소를 하여 1978년 6월에 해산하였다.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서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부의 탄압과 압력에 대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는 조지송 목사의 회고는 당시에 신협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면에서는 아주 무기력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신협을 해산한 후 같은 해 6월19일 ‘다람쥐회’라는 이름으로 290명의 회원이 출자금 1,300만원으로 다시 신용사업을 시작하였고, 1979년 9월에는 회원 540명, 자본금 4,300여만 원이 되었다.

신협은 경제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데(1972년)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72년~82년까지 가장 강력한 민주노조인 한국모방(75년 원풍모방으로 개명함) 노조를 민주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조직된 노동자 163명 중 신협 조합원이 5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산업선교회 신협이 단순히 경

제적 상부상조 조직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서울로 가는 길’의 저자인 송효순도 신협에 저축하러 다니다가 산업선교 회원이 되었다고 하였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1976년 5월 120명의 노동자들이 각각 1만원씩 출자하여 공동구매조합을 결성하였다. 모든 물건은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며, 조합원들은 통장과 원장에 자기가 산 물건의 판매가와 이익금이 기입되었다. 6개월 마다 결산하여 전체 이익금 중 경비를 제하고 남는 돈은 조합원들에게 환불되었다. 조합원은 6개월마다 보너스를 받는 셈이었다. 1976년 조합원 257명, 총 출자금액 257만원, 총 거래금액 6,252,940원, 이익금 1,228,895원이 되었으며, 1980년에는 조합원 수가 450여명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구매조합은 1982년 5월9일 총회에서 해산하고 마는데, 1980년 5.17이후 전두환 정권의 극심한 탄압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조지송 목사는 3차에 걸쳐 주택협동조합을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17명이 투자하여 자본금 300만원으로 ‘선교타이어 주식회사’라는 폐타이어 재생공장을 설립하여(1968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공장은 일종의 노동자협동조합이었는데 처음 목적은 선교활동을 위한 돈을 벌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단돈 10원도 뇌물이나 접대비로 쓰지 않고, 주일은 철저히 쉬고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정한대로 대우를 해준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경영책임자가 두 손을 들고 말았으며, 그 후에 의수족을 만드는 공장을 하여 한때는 종업원이 7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문을 닫고 청산을 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외에 인천산업선교회(1961년 설립)도 산우신용협동조합(1970년 설립으로 추정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1972년 12월 울산산업선교회의 정하성 목사는 ‘영남복합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인천산업선교회는 1967년 “소비조합 운동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1) 지도자 훈련 2명, (2) 예비조사 및 회원에게 교육실시라는 보고와 “대외훈련”중 협동조합훈련 1명 등

의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소비조합과 협동조합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산업선교회의 협동조합과 공동구매조합 활동은 노동조합에도 영향을 미쳐서 원풍모방노동조합이 1978년 1월25일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고, 1979년 8월29일에는 공동구매조합을 만들었고, 동일방직 노동조합도 1974년 9월 소비조합을 시작하였고, 신용협동조합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신협과 공동구매조합이 민주노동운동과 함께 발전했던 것이다.

라. 천주교 원주교구의 협동조합운동

천주교 원주교구에서는 1966년 11월13일 지학순 주교의 사목지침에 따라 신자 35명이 6만4천여 원을 출자하여 ‘원주신협’을 설립한 후 교구 안에 신협을 확산시키고, 진광학원 내에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협동조합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교육하였다.

1972년 8월19일 남한강 유역에 대홍수가 닥쳐 강원, 경기, 충북의 13개 시, 군이 막대한 홍수 피해를 당했다. 지학순 주교의 노력으로 외국 천주교회의 지원을 받아 1973년 1월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수해대책과 긴급 구호 사업이 끝난 뒤, 이 위원회를 ‘사회개발부’로 전환하여 농민들과 탄광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생계대책과 마을 전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운동을 모색하였다. 상담원이라 불리던 11명의 활동가가 발로 뛰며 현장을 순회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원주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한우작목반이 성과를 거두면서 신협을 만들어 출자금을 관리하고, 구판장을 만들어서 농자재와 생필품을 공동구매 하기 시작하였다. 구판장이 발전하여 소협이 되었고, 1979년에는 10여개의 소협이 모여서 소비자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어 가격 교섭력을 높였다. 이후 소협이 계속 증가하여 2년여에 걸쳐 총 40개에 이르게 되었다.

1977년 태백, 장산 등 탄광지역에서도 10여개의 소협이 생겼으며, ‘소비자협동조합광산지역협의회’도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했던 농촌과 광산지역의 협동조합들은 80년대 들어 이농증가와 석탄 수입으로 광산촌이 몰락함

으로써 힘을 잃었다.

천주교원주교구의 활동은 80년대 한살림으로 발전하게 된다.

마. 홍성지역의 협동조합운동

해방 전 이승훈, 조만식 선생과 같이 오산학교와 용동촌에서 ‘이상촌 건설’의 일환으로 소비조합 활동을 했던 이찬갑씨가 홍성군에 풀무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1958년 4월), 풀무신협을 정식 창립하였다.(1972년10월) 풀무신협은 고리대금을 근절하고, 조합원들의 위생과 건강을 챙기고, 가축방역사업을 벌이면서 1978년에는 조합원 234명, 출자금 640만원, 총자산 2,400만원이 되었고, IMF 경제위기도 아무 탈 없이 넘겨낼 정도로 건실하게 성장하였다. 1969년 소비조합을 발족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1980년 5월에 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재창립하여 홍성지역에 협동조합을 확대하였다.

바. 그 외 협동조합(청십자의료협동조합, 양서협동조합, YMCA 협동조합)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은 장기려, 채규철씨 등이 중심이 되어 1968년 5월 부산에서 출발하여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인 1989년 6월 말까지 활동하고 해산하였다. 해산당시 조합원 23만 명으로, 정부의 의료보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의료협동조합의 선구자이다. 그 외에 1976년 서울의 빈민촌인 난곡에서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988년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양서협동조합은 부산에서 1978년 4월에 김광일 변호사, 김형기, 김희욱, 최준영 등이 참여하여 조직되었고 ‘협동서점’을 열어 “좋은 책을 적정 가격에 보급하고, 경제적 민주주의와 협동주의 경제 확산”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여 79년 9월 말에는 조합원 501명, 출자금 5백만 여원, 판매액 약 1,280만원을 기록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79년 10월 부마항쟁 이후 그 배후로 지목되어 해산당하게 된다. 양서협동조합은 78~9년에 마산·창원, 대구, 서울, 울산, 광주, 전주, 수원 등으로 확산되었지만 80년 초까지 군사정권의 감시, 재정난 등으로 해산하였다. 주로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

했던 양서협동조합은 독재정권의 마수를 피하지 못하고 말았다.

YMCA는 일제 말기에 해산 당했던 협동조합운동을 70년대 초반에 다시 시작하였다. 72년 3월 광주YMCA가 신협을 창립하고, 74년부터는 서울YMCA가 경기도 화성 등에서 양곡은행을 시작하여 후에 양곡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76년부터는 한국YMCA연맹이 독일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신협, 양곡조합, 축산 협동반 등을 조직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도시에서 생협을 조직한다.

3. 평가와 전망

1970년대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기본은 경제조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협동조합은 정보의 공개, 교육의 실시, 민주적인 운영, 대외적으로 자주성의 유지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전체가 우리사회 민주화의 암흑기였다. 일제 말기 이후 단절되었던 자주적인 협동조합도 60년대 다시 조직되어 70년대 그 싹이 자랐다. 70년대 자주적 협동조합은 농어촌, 탄광촌의 서민들이 신협을 조직하여 고리채를 정리하고, 소협을 통하여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의 효과를 통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했다. 물건의 원가를 계산하고, 회계기법을 익히면서 서서히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력을 키워가던 시기였다.

신협이나 소협이 그 자체적인 유용성도 확인하였지만, 농어촌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또 공장에서는 민주노조의 활동의 일환으로 협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민주화를 향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때였다. 저곡가, 저임금에 기초하여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공업화를 추진하던 시기라서 급격한 농촌의 해체가 일어났던 때였다. 따라서 1970년대 시작한 농어촌, 탄광촌

의 협동조합은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

노동현장에서 발전한 협동조합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정권이 집요하게 민주노동운동을 파괴함에 따라 산업선교, 민주노조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1987년 노동자 대파업투쟁 이후에 노조활동은 활성화 되었지만 협동조합 전통의 단절로 인하여 신협, 소협 등의 활동은 제대로 부흥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다. 전투적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일상 활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보장과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재평가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기 속에서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생활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예금이 큰 폭으로 일반은행에서 신탁으로 이동하고, 미국에서는 점령운동(Occupy)이 주창하여 65만 구좌가 일반은행에서 협동조합으로 옮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협이 발전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전해온 육아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택협동조합, 태양광발전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여러 가지 문화협동조합 등이 꽃을 피워서 협동과 상생의 정신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2년이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며 12월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다시 협동조합이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재벌가가 골목상권까지 독식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동조합도 정보를 공개하고, 조합원 교육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운영혁신을 통하여 그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직 등이 신협, 소협, 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스스로 조직하거나 이들과 연대하면서 일상적인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거대 협동조합들이 70~80년대 군부정권에 의해 통제당하여 말살됐던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이며, IMF구제금융 시기 부실화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 사실상 신규조합 설립이 안 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다시 활발하게 조직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사)한국생협연대, “새로운 생협운동”,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2009.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주년기념심포지엄 자료집 “한국 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A.L. Laidlaw, 김동희 역,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2000.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사업부, 노동자경제공동체에서 지역생활공동체로, 영등포산업선교회, 1988.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영등포산업선교회, 199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산업선교25주년기념대회,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약한 것을 강하게-산업선교신학과 활동보고 1”, 1975.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원풍모방노동운동사 발간위원회, 원풍모방노동운동사, 삶이 보이는 창, 2010.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8.

서덕석, 조지송목사 평전 바보들의 행진, 미발표원고.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때/곳: 2012년 2월28일(화)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회의실

참석: 신종철(경기도의원, 전 아이쿱부천생협 이사),
안상연(아이쿱남원생협 이사장),
오귀복(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
이화수(정당정치인, 아이쿱부산푸른바다생협 조합원),
홍준호(서울 구로구의원, 아이쿱구로생협 이사)

사회/정리: 김아영(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사회의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의 관계’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결사체로서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 역시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접 정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협동조합 활동가들을 모시고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의 관련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경기도의원/이하 신종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원이고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쿱부천생협 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호(서울 구로구의원/이하 홍준호):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구로구의원이고 아이쿱구로생협 이사로 활동했고 올해는 아이쿱구로생협 홍보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화수(정당 정치인/이하 이화수):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 사하구 을지역에서 4·11 총선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열심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쿱부산푸른바다생협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오귀복(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이하 오귀복):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아산YMCA 생협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상연(아이쿱남원생협 이사장/이하 안상연):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쿱남원 생협 이사장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총선대응기획단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치와 우리의 생활이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예외는 아니죠. 생협의 예를 든다면 어떤 조합원들은 생협이 안전한 먹을거리만 다루면 되지 왜 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좌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의 민주주의, 과연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토대

홍준호: 우리나라에 농협이나 축협 등 오래된 협동조합이 있지만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즉, 생협을 중심으로 말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협동조합은 원리 자체에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뿌리 단위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높은 지위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



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협동조합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꾸로 사회의 민주주의가 협동조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돌아보면 1920년대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지만 일제 침략 등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사회의 민주주의 상황에 따라 억압, 소멸되기도 하고 부활해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의 결과가 지금의 생협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연: 저는 1987년 당시의 의제들은 체제와 관련된 무거운 담론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가면서 구체적인 생활에 와 닿는 주제들이 부각 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먹을거리 문제가 생협을 통해 중요한 사회의 주제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화수: 저는 협동조합이 왜 시작됐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즉 시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사는데 부딪히게 된 여러 가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으며 제대로 생활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생협으로 표출되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찾겠다는 욕구가 노동조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문턱 높은 은행과 다른 것을 만들어보자는 욕구가 서민금융조합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의 재벌들과 국가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제대로 표출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현되고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협동조합

오귀복: 사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회가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시스템이나 제

도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 시대에 얼마만큼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가, 자기들의 권한을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독재를 타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나 권력자의 교체를 통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십년을 본다면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그만큼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의 농협의 모습,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십년동안의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만큼 협동조합 운동의 모습이 예전처럼 관이 주도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사회 흐름이나 목소리를 담는 형식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발전한 협동조합이 과연 사회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거죠.

올해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 전체에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 주체들이 그만큼의 능력이나 소양,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문제와, 가지고 있는 경험만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일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후자의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 하겠지만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장의 모습과 일맥상통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

안상연: 저는 조합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협은 민주주의의 학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서로 대화하면서 타협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생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인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오귀복: 어떤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에 있고, 인간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의 소통 방식이 위부터 아래로까지 쪽 보고되고 내려가는 방식이라면 협동조합은 끊임없이 합의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협을 10년 정도 했는데 제일 많이 배운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인내와 기다림인 거죠.

신종철: 저도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과 민주주의는 주제가 조금 섞여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운동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동조합이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들 속에서 출발했다고 봤을 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사회 전체의 정책 유지나 사회적 과제를 위해서 활동하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경기도의원, 전 아이쿱부천생협 이사)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독재나 전체주의에 저항은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결정하고 상명하달과 강압에 익숙하죠. 타인의 의견을 듣기보다 어떤 논점이 나오면 늘 대립하고 각을 세우는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소통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1인1표라는 원칙을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관계라는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이었나요? 오늘 좌담회에 참석한 분들께서 무문에 현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웃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협동조합과 사회의 민주주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모습으로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이러한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사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80년대 중반, 노동자의 참정권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을 때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1인1표의 원칙을 세우면서 앞선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대립이 커졌을 때 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공화정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후퇴나 위기라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 부분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홍준호: 저는 현재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직되

지 못한 개인들이 현실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이나 소규모 집단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구현되지 못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지지로 권력을 얻게 된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일방적인 독주가 사회 갈등과 대결구도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는 거죠.

또한 정치 사회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다수에 의한 독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4대강과 국회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미네르바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심지어 용산 참사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민주주의와 경제적 부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상황을 어떻게 볼거나 하면 다시 막히게 됩니다. 일단 평이하게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군사정권부터 독재정권 등 권위주의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민주주의가 분명히 외향적으로 발전되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외향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도 일정부분 변화했다고 봅니다. 실제 세대들도 바뀌었죠. 세대 자체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의 문제를 과연 민주와 반민주의 가치 척도로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요. 지금은 어쨌든 민주주의가 변화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 구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 중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여러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재벌의 독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 열려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이 언론권력을 잡으면 여론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언론 권력을 잡아도 여론을 좌

우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언론의 영역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소수의 권력들이 무작정 장악하는 시대는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안상연: 저도 어떤 시점에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다른 시점에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아니다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민주라는 개념보다는 진보라는 개념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보가 뭐냐, 진보가 내 것이냐 아니면 누구의 것이냐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진보를 평이하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대변될 수 있는가, 억눌린 사람이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귀복: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민주주의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누가 독재를 하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투표권, 선거권 등 권리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민주주의가 내면에서 훈련된 게 아니라 쟁취해야 했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확장된 만큼 사람들의 요구도 개인의 권리 즉 투표권이나 참정권을 넘어서서 생활의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일본에서 먼저 사용한 생활정치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평범한 개인의 생활세계가 하나의 정치적 의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출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저는 2008년의 촛불이 그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등장한 게 아니라 내면화돼있던 생각의 변화가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과 훈련을 받아 온 협동조합이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화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이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충격으로 일어 있었던 거죠. 결국 2008년의 촛불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자각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촛불들이 모여 희망버스로도 이어지고 사회 곳곳의 문제에 대해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보면 이미 대중들은 선거에 대해서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는 큰 담론부터 아주 생활적인 담론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의



틀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권리나 자주성이나 억압되면 그것을 깨치고 나아가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가고자 하는 흐름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과 선거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사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입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한다거나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마다 다른 개념과 정의로 민주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의 합의된 개념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담론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 지금 우리 사회는 참여와 소통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는 분자화 된 개인이 아니라 협동의 힘으로 참여와 소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4·11 총선입니다. 좌담회 서두에 언급됐던 것처럼 협동조합은 사회의 민주주의를 반영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협동조합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협 현장에 있는 분들과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군요.

신종철: 저는 선거와 관련해서 낙선운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규정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정치 세력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자체의 생활적인 고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구분하여 나눠보는 맥락에서, 중요한 선거를 통해 협동조합이 민주성을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나 우, 여와 야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생활적 요구와 근거에 기초하여 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후보들에게 그것을 고민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환경 급식의 경우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화수: 협동조합은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살겠다고 하는 욕구를 풀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에서 당파성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필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위에서 가장 활동력이 있거나 확실한 사람을 후보로 내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거나 지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선수를 내보내든가 다른 선수에게 우리의 것을 전폭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죠.

홍준호: 저희 지역의 경우 생협 조합원들이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정책에 대한 검증, 소속 당과 후보의 정책이 협동조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협에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선거에 무관심한 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수: 협동조합도 다른 시민운동 단체들과 같이 민주적 조직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됐을 때, 이 단체의 규약 중 정치의 중립이라는 용어가 없고 사회 민주화에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적으

로 활동이 자유로운 거죠.

반면에 협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틀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안상연: 제가 남원생협 이사장인데, 만약 출마한다면 한 다섯 명 정도나 지지 해주려나 싶습니다.(웃음) 한 생협 안에 여러 후보자들이 있다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관 자체에 특정한 정당과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되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문항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자유롭게 낙선, 당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조합의 성격 상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우리 단체와 함께 실천할 후보는 누구인지 등을 찾아내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그런 의제를 함께 할 분들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 생협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장하는 의제는 어떤 것입니다’라고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라는 주요 의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 사안 중에서 현재 남원의 경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후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귀복: 저희 아산YMCA생협도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조합원입니다. 사실 조합원이 500여 명 밖에 안 되는데 출마를 많이 하셔서 멧쩍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조직과 사람의 문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나 색깔의 차이 때문에 인간적으로 관계를 절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선거 시기에 조직과 사람의 관계 맺기가 가능한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평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협동조합이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적인 경험과 훈련을 한다는 것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수많은 과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조직의 풍토나 문화로 만들었던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FTA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농업 문제를 같이 진단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노동의 문제를 정치 지평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생협이 던져줄 수 있는 화두는 “당신이 누군가를 찍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 시기에 당신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올려놓고, 이것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실제 협동조합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협은 마을모임이라는 가장 기초 조직부터 총회라는 가장 굵직한 기관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상연: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매번 모든 선거가 뭔가 결정하는 선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계속 정답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교육하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선거 풍토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선거의 객체에서 주체로 인식을 바꿀 때 다른 경제, 다른 정치는 가능하다

신종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주제건 결론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협동조합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조

급하게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고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냐로 간단
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논의하지 못하고 분열될 것입니
다. 또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정치적 편향을 가진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
다. 저는 결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를 꺼내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들을 한다면 선거를 통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연: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주변의 가까운 문제들만 보다가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눈으로 보는 것은 4
년에 한번 씩 오기도 하고, 2년에 한번 씩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
합원들이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는 힘과 바탕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토론을 활성화하는 모임을 계속 제
공해야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시기마다 우리가 관철하고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이것이고,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의지하
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준호: 협동조합과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보면 생활정치를 구현한다는 좋은
생각과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상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은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과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의 영역을 보면 공공 부분과 시장 부분이 있고 시장 외적인 영역에서 협동조
합 등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외적인 부분의 확대가 아주 중요
한데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져 주고 조합원들의 의식도 강화된다면 협동조합이 자신의 역할
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조합의 노력으
로는 한계가 있고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이론적인 내용을 이슈화 하시는 분들
이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업이라는 얘기가 우

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기업으로 가고 있고, 자활 공동체도 협동조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장 외적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꼭 그길로 가야된다는 아젠다를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귀복: 저는 지역에서 ‘다른 경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실험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지역에서 실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계층이 있는데 자기 존재에 맞춰서 고민을 합니다. 어제 공부 모임의 주제가 ‘장애’였습니다. 특히 지체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돌봐줄 수 없다면 이것을 집단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이어지죠.

예전에는 선거 때가 되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찾고, 후보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당선된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유권자가 선택했기 때문에 유권자도 책임을 지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의 고민이 내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 한사람을 뽑는 것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는 다른 방식으로 임해보자라는 의견을 모았는데 저는 협동조합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대를 메는 한사람을 지정해서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선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선거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수: 저도 오귀복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보니 선거운동원이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SNS를 이용해서 전국방방곡곡으로 전파되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끌어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창조적인 방식이죠.

선거를 넘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협동조합의 과제

사회: 선거를 앞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인물 중심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요구들과 논의를 협동조합 형식에 맞게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협동조합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이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정당을 만들어 활동 범위를 범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협동조합과 사회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함



에 따라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4·11 총선을 넘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화수: 올해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해야 할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을 개혁해야 합니다. 금산분리정책이든 출자총액제든 일정하게 재벌을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소유구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주체로 민영기업이 있을 수 있고 국영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유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다양해지면 사회적으로 부가 분산되는 효과와 새로운 대안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 권력이 집중되고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홍준호: 저희 구로생협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합원이 300명 증가했습니다. 활동은 많이 했지만 조합원이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합원이 1,500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의 비전은 1만 조합원 시대입니다. 저는 무늬만 협동조합인 농협과 축협 등의 조합원 900만 명보다 구로생협의 1만 조합원이 우리 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 조합원 시대에는 협동조합 운동이 지금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조합원의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소규모일 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합원들이 많았다면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

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가졌으나 받쳐주는 힘들에 대한 고민들을 생기는 거죠. 홍의원님 말씀처럼 생협의 조합원 1만 명이 농축협의 900만 조합원과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생협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수: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공동체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복원을 이야기 합니다. 부산에서는 행복마을, 희망마을, 심지어 재개발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뉴딜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주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에 정작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가 빠져있는 거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이 돈을 지원해주고, 멋진 극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공동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생협은 철저하게 조합원 중심이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조직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의 여러 생협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는데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안상연: 일단 생협의 경제적인 면을 본다면 생산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치되어있던 소비 부분의 민주화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한 가지 제품만 쓸 수밖에 없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만의 소비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비영역으로 의식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서민도 유기농산물을”이라는 슬로건에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평이한 슬로건이지만 유기농산물이 서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합원들이 진보다, 아니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귀복: 협동조합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뒤돌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고르기와 기다림이 협동조합 안에서 필요하죠.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50만 가구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50만 가구면 한국 사회의 3%가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 3%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정말 바꾸고자 한다면 어떤 세상으로 바꿀 것인지, 누구와 같이 바꿀 것인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고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과 기반을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같은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이 고민들을 해봤잖아요, 꿈도 꾸고 그리기도 하고. 지금은 의제도 넘쳐나고 그 부분에 대한 쟁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바꾸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힘은 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으로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끊임없이 바꾼다고 얘기해왔고 NGO도 이야기 해왔지만 반복되는 건 결국 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오늘 4·11 총선을 앞두고 실제적이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과 민주주의’라는 주제 자체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진솔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전망과 바람들이 현실에서 구체화되기 바라면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 이슈** ▪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르뵈 세 가지 물음- 정리해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¹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1. 설립 · 운영에 관한 법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협동조합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해 한다. 또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개발에 유용하다고 하니,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실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상 사회적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함이다.

민간입법운동 초기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기본법안의 내용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결국 협동조합의 자주 · 자립 · 자치적 성격에 걸맞게 지원과 육성의 내용을 가능한 배제했다. 지원과 육성에는 규제와 감독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의 자주 · 자립 · 자치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이다. 따라서 지원과 육성에 관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지원과 육성 정책이 없으면 누가 협동조합을 하겠느냐고 하지만, 지원과 육성 정책이 없어서 협동조합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인 것이다.

¹ 본인이 작성한 「민간 입법실무 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협동조합기본법 긴급해설서」 및 「협동조합기본법,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비법」을 재구성 · 보완함.

2. 4개 협동조합 조직

개념적으로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영리적 성격의 협동조합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명의 편의상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가 필요할 때는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으로 칭하기로 하겠다.²

앞서 우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직은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이다. 즉, 이들 4개 협동조합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협동조합기본법의 몸통 부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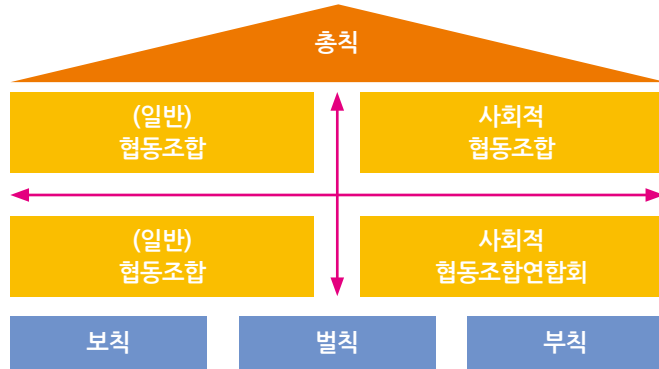
4개 협동조합 조직 중에서 일반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만 온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나머지 3개 조직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 명시하고, 공통된 사항은 일반협동조합을 준용하는 식으로 일괄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 총 119개조 중에서 56개조를 일반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에 할애하고 있다.

3. “4장 4칙” 구조의 이해

흔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총7장(119조)+부칙(3개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분석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나는 대신 협동조합기본법이 “4장 4칙”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4장’이란 앞서 말한 4개 협동조합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할애한 몸통 부분을 뜻한다. 그리고 ‘4칙’은 총칙, 보칙, 별칙, 부칙을 말한다. 4개 협동조합 조직의 공통적인 사항 중 기본

² 협동조합기본법상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적인 부분은 앞으로 빼서 총칙으로 머리를 만들고, 부차적인 부분은 뒤로 빼서 보칙, 별칙, 부칙으로 꼬리를 구성한다.



<그림 1> 협동조합기본법의 “4장 4칙” 구조

결과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4장 4칙” 구조는 위 <그림 1>과 같다.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의 순서에 따르면, “1장 총칙, 2장 협동조합, 3장 협동조합연합회, 4장 사회적협동조합, 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장 보칙, 7장 별칙, 부칙”으로, ‘7장+부칙’의 구조와 일치하게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다. 나머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한다. 끝으로 보칙, 별칙, 부칙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만을 기억한다.

4. ICA 7원칙과 협동조합기본법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ICA 7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ICA 7원칙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재구성해 본다.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0, 21①) 또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다음해부터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4①, 26①)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3①) 협동조합은 총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28①&②)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9①3, 41①&②) 한편,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다. (75)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22①) 이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22②)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손실보전→법정적립→임의적립→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51②)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이하여야 한다. (51②)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에게 일절 배당할 수 없다. (98②)

-4원칙: 자율과 독립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0①)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0①, 11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11①)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7)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45①1&3) 또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9①&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49④)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경영공시자료는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96④)

-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①) 이를 위해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8②)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45①2)

-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45①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 한다. (93①)

5. 자유로운 설립과 기본법적 성격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하나의 문구로 표현하면 ‘자유로운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설립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1차 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 설립 가능했던 협동조합도 조합원이나 출자금 등의 설립기준이 높아 자유로운 설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8개 개별법 다음에 만들어진 9번째 개별법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본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비록 기존 협동조합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개별법과 기본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법을 우선한다’고 명시했음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는 기존 개별법에 담아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담겼다.

첫째, 기획재정부를 협동조합 주무부처로 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3년마다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둘째,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셋째,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 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했다. 원래 7월 첫째 토요일은 ICA에서 기념하는 ‘국제협동조합의 날’인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이를 아예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협동조합 활성화 전망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

합'을 말한다.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협동조합은 인적결사체이면서 사업체로서, 이상과 현실, 운동과 사업이라는 양날개로 움직인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기존 민법상 법인 및 상법상 회사와 비교하여 스펙트럼으로 그리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적 성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다.

경제 영역	하이브리드 영역		사회 영역
상법	협동조합 기본법		민법
영리기업 규율	인적결사체 기업의 규율		비영리조직 규율
사익(私益)	공익(共益)	공익(共益)	공익(共益)
주식회사 등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그림 2> 법인격 스펙트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를 내다보는 경제규모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개발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시작했던 해외 선진 협동조합과 같은 발전 경로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초기에는 주로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약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10대 분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둘째,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협동적 방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할 것이다. 셋째,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

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청년 등 초기 자본 동원이 어려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소규모 창업을 시도할 것이다. 다섯째, 낙후지역 등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해 갈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 등 한계노동자들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곱째, 보건의료, 공동육아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덟째, 주택,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재의 탈시장화를 도모할 것이다. 아홉째,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여가가 활성화될 것이다. 열째, 로컬푸드, 도농교류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정적 결합의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선택될 것이다.

7. 법제정 운동에서 설립 · 전환 운동으로

8개 개별 협동조합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비공식 협동조합 진영이 그토록 원했던 협동조합기본법은 오는 12월1일이면 무조건 시행된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그토록 원했던 비공식 협동조합 섹터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무덤덤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짐작만 확실하다. 그렇기에 민간입법운동 진영은 협동조합기본법의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협동조합 설립 · 전환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그리고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겠지만, 협동조합 총연합회의 지향은 지금 단계부터 명확히 가져 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  합의 해’를 맞아 민간 협동조합 섹터가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기대해 본다.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흥순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1. 철도의 발자취

새벽안개 속에 사랑하는 이를 열차에 떠나 보내본 이들은 알 것이다. 거대한 쇳덩이가 사람의 심장을 얼마나 아리게 하는지. 어미 잃은 동물만 슬프게 우는 게 아니다. 커다란 쇠바퀴를 굴리며 사라져가는 기차의 기적이 내는 울음 소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노스텔지이다.

근대는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한다. 철도가 세상에 놓이기 전까지 인류는 2000년이 넘도록 같은 이동 속도를 가졌다. 기원전 카이사르의 군대가 옛 프랑스 땅인 갈리아원정을 떠날 때나 나폴레옹의 군대가 프로이센을 공격하기 위해 진격할 때의 속도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죽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세례를 받은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고 그 한 가운데 철도가 있었다. 철도는 인류에게 24조각으로 나누어진 시각을 선사했고 공간을 바꿔버렸다. 마법소설이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고속이동을 현실로 만들었다. 인류는 비로소 자연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 쇠로 만든 두 줄의 길이 열렸고 이 길들은 실타래처럼 지구를 감쌌다. 인류에게 기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존재했던 것 같은 친구가 되었다. 근대의 인류에게 이 친구는 생산을 폭발시키고 부를 축적시키는 좋은 친구이기도 했지만 고향을 버리게 하거나 힘센 자들의 침략에 비극적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친구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철도는 이 땅을 유린하는 도구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선로 마디마디마다 침묵 하나하나에 나라 잃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통한의 길이였다. 식민지배를 끝내고서도 연이은 전쟁과 가난으로

철도는 한 시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이토록 아픈 역사를 갖고 있던 한국철도는 경제부흥기에 나라를 일으키는 건인차가 됐다.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게 했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주었다. 그러나 낯선 웃음도 잠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도로에 밀려 철도는 무대 뒤편으로 내려와야 했고 한물 간 삼류배우처럼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2. 철도는 갯벌과 같은 것

개발만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토건족들에게는 갯벌은 그저 바닷가에 버려진 검은 땅이요 메워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야 할 땅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갯벌은 이 땅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안전망이요 생명의 땅이다. 물새들의 안식처이며 해양생물의 60%가 이곳에서 산란 또는 서식하며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 직간접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갯벌의 뛰어난 오염정화 기능은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갯벌이 사라진다면 육지의 온갖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나 정화과정 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인간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토록 소중한 자원임에도 우리나라의 갯벌은 매립과 간척이 쉽다는 이유로 산업단지나 농지조성을 위해 70년대 이후 전체 갯벌의 약 40%가 훼손, 상실되는 수모를 겪었다. 매립이나 간척사업에도 나름대로의 필요와 논리가 있지만 그 논리 한 켠에는 갯벌은 버려진 땅이며 별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 진흙덩어리로만 보이는 갯벌을 매워서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면 얼마나 효율적인가. 거대한 농토를 만들어 농작물을 생산한다면 또 얼마나 이익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자연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갯벌은 환경적 가치로 따지면 어류의 산란장, 유생성육장¹, 서식지, 패류의 서식지, 물새 및 기타 야생동물의 서식지, 오염물질 여과, 토사제거, 산소생산,

¹ 먹이가 풍부하고 환경이 안정되어 산란장에서 표류해 온 자어가 자랄 수 있는 해역. (편집자 주: 네이버 사전 참조)

영양 염류 순환, 화학물질 및 영양 염류 흡수, 수중생산력 향상, 미세 기후 조절 등 우리의 육상 및 해상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가치로 따져도 홍수조절, 해상재해방지, 해안침식 조절, 지하수 양의 조절 및 재공급, 목재 및 기타 천연자원 공급, 에너지원(탄층), 가축의 먹이, 어장 및 양식장 제공, 심미적 가치, 교육 및 과학조사, 문화적 자산, 고고학적 자산 등 인간이 일부러 만든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갯벌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갯벌은 자연이 인류에게 수 천 년 간 만들어준 선물이다. 때문에 갯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3. 진정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철도가 주는 사회적 이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도로교통의 대기오염 비용이 11조 4,310억 원이 발생하는데 비해 철도는 2,865억 원으로 도로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승객 1000명과 화물 1톤을 1킬로미터 수송할 때 발생하는 환경비용도 도로는 8만5888원이 드는데 철도는 2만6164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18배, 버스에 비해 3.9배, 화물트럭에 비해 8.8배나 효율성이 높다. 국토이용률 측면에서도 철도는 도로에 비해 훨씬 적은 면적으로 수송을 담당할 수 있어 환경파괴나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만약 경부선 철도가 없고 도로로 경부선 철도의 교통량을 수용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이다. 철도는 갯벌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두 눈부시다고 말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빌딩들과 거리를 뒤덮은 차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채찍 속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사회의 모든 사람이 무한경쟁에

나선 전사가 되었다. 세계최장시간의 노동시간에도 아랑곳 않고 오직 승자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낙오되지 않게 뛰고 또 뛴 결과였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렸다. 도로를 꽉 막은 차들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대기는 온갖 유해물질로 채워졌다. 토건족의 권유로 막힌 도로를 대신해 또 도로를 뚫었지만 땅만 파괴될 뿐 자동차 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둘러보니 이미 다른 나라들은 철도를 대안 교통으로 만들었다. 도로에 쏟아 붓는 돈을 줄이고 철도에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다. 한국도 더 이상 도로교통으로는 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철도에 눈길을 돌렸다. 고속철도가 건설되었고 도시 곳곳에 지하철이 만들어졌다. 철도가 연장될수록 교통혼잡비용은 줄어들었고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으며 대기오염도 적어졌다. 이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늘수록 우리사회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삼류배우에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고 새로운 부활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든 세력들은 돈 벌 궁리만 했고 이번엔 철도가 그 사냥목표가 되었다.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자랑하는 권력과 한국경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재벌이 한 몸이 되어 철도를 수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바로 ‘경쟁’이었다. 그리고 그 경쟁의 대표적 효과로 통신시장의 독점이 깨지고 민영화되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는 정부의 주장을 담은 자료들이 배포되었고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SK텔레콤과 KT 두 공룡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월가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은폐됐다. 수년간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들 기업들의 안하무인 행태는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이란 것의 맨얼굴이다. OECD국가 중 한국의 통신비 가계부담 비중이 최고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을 통한 통신시장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정부 관료들의 파렴치함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온 사회가 미쳐있다. 유치원생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진정 경쟁을 대체할 가치란 없는 것인가?

4. 이윤에 눈이 멀어 철도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자들

철도를 네트워크 산업이라 한다. 망 산업이란 것이다. 망이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옛날 열차객실에서 팔던 삶은 계란이나 굴도 망에 담겨 깨지거나 상하지 않고 승객들에게 전달됐다. 한 땀 한 땀 뜨개질이 계속될 때마다 더 넓게 퍼지는 실처럼 서로 엮이고 이어져야 제대로 힘을 발휘 하는 게 망이란 것의 특징이다.

철도는 운행이 되기 전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땅을 구입해야하고 선로를 깔아야 하고 역도 만들어야 하며 신호시스템도 만들어야하고 그런 선로 위를 달릴 열차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철도는 엄청난 적자를 안고 시작하는 산업이지만 이런 시설투자비를 과연 적자로 봐야하느냐는 말도 있다. 왜냐하면 거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지 않고 얻어지는 이익은 커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용자가 늘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다.

또 철도의 특징 중 하나는 독점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폐해를 주는 의미의 독점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독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철도에서 독점을 깨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억지로 현실화 시키는 일이라고 철도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 관료들은 서울의 지하철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일찍부터 경쟁을 통해 서로 자극하고 효율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메트로 노선인 수유역-오이도역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경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의 천호역-김포공항역을 노선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각각 할당된 노선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경쟁의 논리에 빠져 철도에 경쟁을 도입한 나라도 있으니 바로 영국이다. 영국철도는 민영화를 통한 경쟁이 얼마나 커다란 재앙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표본이다. 올해 1월2일자 가디언지는 런던에서 노스햄턴까지(한국으로 치면 서울-천안거리) 1년간 통근열차 요금이 840만 원이라는 상상

하기 힘든 내용의 기사를 냈다. 한국의 경우 120만 원이면 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영국은 최근 발간된 영국철도현황과 관련한 맥널티보고서를 토대로 의회에서조차 민영화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보다 30%이상 높은 요금과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국토부 관료들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만 영국의 민영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특히 교통연구원의 이력은 화려하다. 정부는 민영화에 실패한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게 인수시켜 수 조원 적자를 떠넘겼다. 용인경전철은 돈 먹는 하마로 둔갑시켜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만들었다. 모두 과다 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쏟아 붓게 만든 교통연구원이 1등 공신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청부용역을 해준 대가다. 인성은 무시된 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성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나라를 망치는 대표적인 예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끊임 없이 말해 달라. 못난 놈은 되도 못된 놈은 되지 말아달라고! 공부 잘해 관료나 교수로 출세하고, 펜대 굴려 제 나라 제 강산 팔아먹는 자들만큼 이 사회 좀 먹는 자들이 없으니까.

5. 교통은 이제 기본권

지난 2월8일 백범기념관에서는 한국철도협회주관으로 철도와 교통복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처럼 모든 시민이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동권’이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잠시 프랑스의 교통기본법을 살펴보자. 프랑스는 시민이 교통할 자유에 대한 인식을 법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교통기본법 상의 교통권(Le droit au transport)에 따르면 모든 이

용자의 이동할 권리, 교통수단을 선택할 자유, 적절한 접근성, 서비스의 질, 운임의 적절성, 지역사회의 비용부담을 분명히 담고 있다. 이동 제약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이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서민들에게 더 큰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공간정보(주)에서 서울시의 도시철도역 접근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미터 반경을 조사한 결과 소외지역 면적 비율이 강북구(80.94%), 금천구(79.67%)를 상위권으로 관악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등 주로 강북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버스는 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통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마을버스 요금을 추가 지출해야한다. 더구나 마을버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도 아니어서 이 지역의 시민들은 버스에서 배출하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일부구간의 극심한 혼잡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교통인프라에서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다. 서울의 전세 값 폭등으로 더 먼 외곽지역으로 나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통비는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인프라마저도 잘사는 사람들에게 편중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집값은 오르고 생활은 더 편리해진다. 모두가 내는 세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쓰이기보다는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더구나 이런 공공적 교통 분야에까지 민영화의 파도가 덮치고 있다. 국토부가 경쟁도입으로 효율화되었다는 지하철 9호선의 실상을 보면 참혹하다. 인천공항을 인수하려다 사회적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던 호주의 다국적기업 맥쿼리사가 대주주이다. 운영사 역시 프랑스의 다국적기업 베올리아사다. 이들에게 지난해 서울시가 보상해준 금액만 320억 원이나 된다. 예상수익을 높게 잡은 때문이다. 게다가 9호선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지하철과 달리 경기도버스와 환승할인을 거부하고 있고 시는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

다. 역시 민자로 개통된 신분당선은 문제가 많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사라지자 아예 기본요금을 900원에서 1600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들은 지하철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었으니 다소 비싸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이익이라고 공색한 변명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하철도 버스에 비해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많은 노선의 요금을 인상해야한다. 공적영역이 사적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대다수 서민은 이중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바로 세금과 높은 요금이다.

소유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한다. 이미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 이윤이 최고의 목표가 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한들 들을 리 만무하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윤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에 여기 저기 뜯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망이 뜯겨지는 만큼 사회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토부를 앞장세워 추진하는 KTX민영화는 그야말로 재벌에게 주는 특혜의 종합 선물세트다. 14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게 되는 신설노선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흑자가 보장되는 노선이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재벌에 KTX가 넘어간다면 호화로운 최고급 고속철도가 받는 찬사의 크기만큼 산간벽지노선의 철도 노선은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노선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적자만 양산하는 비효율적인 역과 노선들은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역이 사라진 마을은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마을은 더 빨리 쇠락할 것이다. 멸종되는 것은 동물만이 아니다.

6. 조화로운 삶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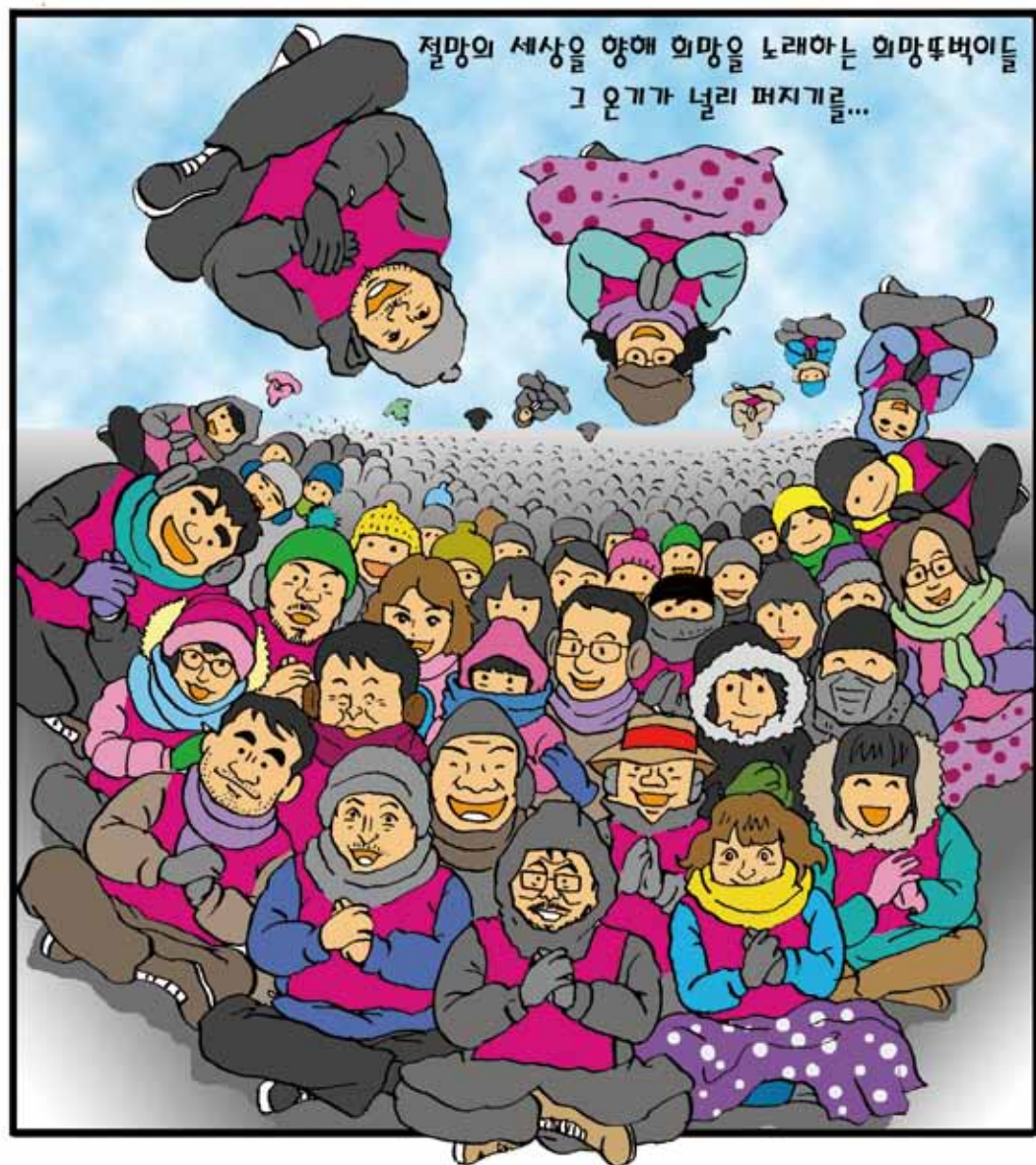
영국은 철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종주국이었지만 철도를 문제덩어리로 만든 면에서도 종주국다웠다. 170여년 전 철도 도입 초기에 영국의 입법부는 경쟁이 독점을 방지할 것이라는 억측으로 수많은 민간 사업자들에 노선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자유경쟁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결과였다. 이런

원시적 실수를 지금 한국에서 되풀이 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 농사 일을 돌보고 탄광 일을 하면서 받은 일당 6펜스로 가정을 도왔던 소년, 열여덟 살에 글을 깨우친 만학도, 끊임없는 상상력과 실험정신의 소유자, 철도시스템이 도로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안 천재, 열차를 운전한 최초의 기관사 조지 스티븐스는 경쟁이라는 말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조화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경쟁하지 않는다!” 

아이쿱 생협만평

이 동 수



세 가지 물음

- 정리해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정 (르뽀작가)

2012년 2월15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를 외치며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시작한지 1,000일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는 인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쌍용자동차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자리나누기와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준비 등 정리해고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자구책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정해진 수순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포함하여 3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점거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단전단수와 용역·관리자들을 동원한 폭력으로, 정부는 경찰·헬기·최루액·테이저건·컨테이너박스 등을 이용한 살인적인 진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공장점거파업 77일, 굴뚝 농성 86일 만에 정리해고자의 42% 무급휴직자 1년 후 복귀와 58% 희망퇴직 또는 분사, 비정규직 노동자 19명 복직 등의 내용으로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 2년 반이 되도록 단 한명의 무급휴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공장으로 복귀하지 못하였으며, 파업 종료 후에 사측은 파업에 참여했던 100명 가까운 비해고노동자들을 징계해고와 정직 등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니다. 또한,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 등에게 400여 억 원의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는 8·6합의 이후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에서 인수하여 2011년 3월14일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기업'이 되어 자동차 생산과 판매대수가 금융위기 이전인 10만대를 넘어섰으나 역물하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이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마힌드라 그룹 역시 상하이차 때와 같은 기술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2월28일, 이유일 현 대표이사와 관련 회계법인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들이 실제 부채비율 187%인 쌍용자동차를 회계 조작을 통해 부채비율 561%인 회사로 만들어 국민과 법원을 속이고 3천여 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리해고로 인해 공장 안과 밖에 있는 노동자와 가족 2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에서 2011년 실시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으며,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80.0%로 나타났습니다.

투쟁 1,000일을 훌쩍 넘긴 지금,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2012년에는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부족한 글을 통해서나마 『생협평론』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필자주>

희망텐트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한 일터를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텐트를 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텐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치된 힘을 보여줍니다. 쌍용차 파이팅! 피땀 어린 우리 일터 농락하면 어림없다!!”

2011년 12월7일 오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 본관 앞에 쌍용자동차 관리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공장 밖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포함한 4백 명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많이 참았습니다. 합의서를 어겨도 참고, 사람이 죽어도 참고, 신입사원을 모집해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천막설치를 선포하겠습니다.”



2011년 12월7일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 희망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이 천막설치를 선포하자, 집회에 참여하던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쌍용자동차 정문 앞으로 가서 천막과 텐트를 설치한다. 경찰의 천막 철거 경고방송이 흘러나오고, 공장안에서 관리자들을 선동하는 목소리도 격앙되기 시작한다.

“쌍용차직원 하나 되어 외부세력 막아내자! 쌍용차는 살고 싶다! 외부세력 물러가라!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2009년에 싸워봤습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고요. 이거 한달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고, 심하면 대선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2교대 만들어서 밖에 계신 분들 데려오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력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매운동 할 게 아니라 차 팔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쌍용자동차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파이팅!!”

“해고는 살인이다”와 “함께 살자”를 외치며 파업 투쟁에 들어간 지 천일을 두 달 남겨둔 겨울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쌍용차 정문 앞에 텐트를 쳤다. 그리고 그곳에 ‘희망텐트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이 희망텐트촌의 의미를 설명한다.

“폭력적인 살인진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밀려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형사 사건이 괴롭히고 있고, 생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파괴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심각합니다. 벌써 우리 곁을 떠나간 동료들이 19명입니다. 그런데도 공장안의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희망텐트촌을 설치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측의 전환배치로 도장1팀 타이어샵에서 근무하다 소위 ‘죽은자’로 분류되어 77일 파업을 끝까지 함께하고 희망퇴직을 했던 차○○ 조합원의 아내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19번째

죽음이었다. 희망퇴직 후, 평택이 싫어 강원도 원주로 가족이 모두 떠났다. 차씨는 천안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 사이 그의 아내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6살 아들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엄마가 걱정 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차씨의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이틀 동안 죽은 엄마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만든 ‘희망텐트’가 회사와 관리자들에게는 그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절망텐트’로 인식되고 있었다. 2011년 11월, 한진중공업 문제가 정리하고 철회로 일단락 된 후에 다음 ‘희망버스’가 쌍용자동차로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쌍용차 사측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누군가의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는 세상이 아이러니하다.

쌍용자동차 포위의 날: 죽지 않고 싸우는 것이 감동과 상징

“지금부터 쌍용자동차 공장을 포위하겠습니다. 공장을 포위하라!!”

2012년 2월11일 오후 8시, ‘2차 쌍용자동차 포위의 날’에 참여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주변 울타리를 따라 인간띠를 잇는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정문 앞에서 ‘살인정리해고철회’와 ‘국정조사 실시’,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 처벌’ 등의 요구가 적힌 현수막을 펴든다. 공장을 향해 폭죽이 20여 분 동안 쉴 새 없이 터진다.

11월 중순 한진중공업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세 차례 진행한다. 포위의 날 행사는 함박눈과 함께 하는 공감과 위로, 분노, 그리고 연대와 행동을 결의하는 장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천명에서 시작한 참가인원이 점차 늘어났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무고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희망텐트를 쳤건만, 그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2차 포위의날 행사에 참여한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 회원들

다음 희망버스가 쌍용자동차로 가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희망버스 기획단은 2달 동안 자체 논의를 한 끝에 희망버스는 단순히 한 단위사업장에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익식의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2차 포위의 날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봉봉바자회’를 열었다. 또, 3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희망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재능교육·코오롱·3M·유성기업·현대자동차비정규직 등 20여 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2주 동안 서울 재능교육에서 평택 쌍용자동차까지 270km를 걸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3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다니면서 받아온 소원지를 파견미술팀이 만든 ‘희망의 소금꽃 나무’에 희망의 열매로 매달기도 했다. 쌍용자동차에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같은 상징이 없어 사회적인 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황철우(희망버스 기획단)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진중공업에서는 김진숙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

났습니다. 쌍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고 싸우는 것이 엄청난 상징입니다. 그것이 주는 감동이 큼니다.”

1000일: 쌍용차는 우리가 다녀야 정상화 될 것

2월15일, 투쟁 1000일이 왔다. 이 날은 21번째로 세상을 떠난 민○○씨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오전 7시 20분, 아침 출근 선전전이 시작된다. 정문 앞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준다. 2년 6개월 전까지 함께 일했던 이들인데, 누구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또 누구는 공장 밖에 남는다.



투쟁 천일이 되는 2월15일 아침 출근투쟁을 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천일을 맞이하며 답답하면서도 또다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을 떠나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646명이 전국의 영업소와 관공서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에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풍림빌딩 앞에서 조합원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지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투쟁 천일의 아침이 땀땀하게 시작된다. 공장 앞 쌍용자동차지부 사무실 입구 낱파판에 ‘투쟁 1000일 차’를 붙인 조합원을 어렵게 찾았다. 자정이 지나 자마자 ‘1000일’을 붙인 이는 2009년 당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억울해서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김상구 씨였다. 근무 당시 사시 조립 일을 했다는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1,000일까지 출력을 해두었다고 한다.



“결국은 천일이 왔구나. 이제 3자리에서 4자리로 바뀌는구나.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하다보면 지치죠. 짜증도 나고,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다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 공장 안에서도 힘들잖아요. 쌍용자동차는 우리가 다녀야 정상화 될 거예요.”

출근투쟁을 마치고 들어오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육개장이 준비되어 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하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비해고자 신분으로 77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폭력행위 가담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당한 신동기 조합원의 솜씨다. 그의 부당해고 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고,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고법에 올라오자 사측이 판

결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김앤장으로 바꾸었다 한다. 지역에서 받은 희망 김장 덕에 주로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만든다는 신동기 조합원은 “함께 먹는 것도 투쟁”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와주는 분들을 볼 때 행복하단다. 자신과 아이들의 보험마저 해약하면서 버티고 있는 신동기 조합원에게는 재능교육이나 다른 투쟁 사업장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해주고 싶은 꿈이 있다.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2월13일 오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촉구 토론회-마힌드라에 드리운 상하이기차 그림자 ‘죽지 말고 살아서 싸우자!’>가 금속노조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현재 상황과 이후 투쟁 방향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가 총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평균 대수가 23.6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나 일인당 생산 대수가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생산가동률이나 노동강도 측면에서도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1년 쌍용차의 생산과 판매대수가 금융위기 이전인 10만대 수준을 넘어섰고, 2010년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설명을 한다. 1인당 생산대수는 쌍용차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2009년 정리해고로 인한 인원감소와 신규채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쌍용차는 교대제 개선 등을 통해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16만대 생산체계가 갖춰지는 2014년쯤에야 복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2011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는

2016년까지 4개 신규 차종 출시 등의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입되는 자금이 없으며, 마힌드라는 신차개발비를 쌍용차에서 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마힌드라 인도 공장에서 렉스턴이 출시되었다며, 이 역시 기술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쌍용자동차지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초까지 약 5백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들의 전환 배치 과정에서 희망퇴직과 업체폐업이라는 형식으로 쫓겨났다. 8·6 합의에 의해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9년 10월1일 자로 즉각 복직하기로 했으나 사측은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면서도 복직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2년에 입사해서 7년 동안 쌍용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한 윤수 씨는 “77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안에서 힘을 못 쓰고 눌러 있어요. 자신이 노동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라며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노사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평택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130여 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해왔다.

복직투쟁을 하는 조합원들 중에는 정비 일을 했던 노동자들도 있다. 박일 조합원은 한 솥밥 먹던 동료들이 해고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비해고자로 77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파업 참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했다. 정비 일 40년 베테랑인 그는 정년을 일 년 남겨두고 있지만, 꼭 복직해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쌍용차는 8·6합의 이후 구로만 남기고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소를 다 외주로 돌렸다. 쌍용차에서 정비 일을 19년 하다 해고된 문기주 씨는 “외주화 하면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영 서비스센터는 이상이 없으면 안 고치는데, 외주업체는 돈을 벌기 위해 고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고친다는 거다. 또 무료로 해줄 것을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이 안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

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간판이 똑같이 달려있어 고객들은 직영인지 외주업체인지 알 수 없다. 쌍용차지부 정비지회 소속 해고노동자들은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출자하여 서울 구로동에 ‘한성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02-854-1137) 구로 정비사업소 앞에서 아침 출근투쟁을 하고 한성카센터로 출근하는 해고노동자 조승형 씨는 “한성 카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이라고 이야기 한다. 요즘 고객이 별로 없어 정리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다 한다.

공감과 치유: 피해자끼리 상대적 가해자를 찾다

쌍용자동차 투쟁 천일에서 며칠이 더 지난 주말 오전, 평택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공간 ‘와락’에 갔다. 지난해 봄에 시작한 집단치유상담이 어느새 4기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죽을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 하나 죽으면... 정문 앞에서 “나와라!” 휘발유 뿌리고, 유서 쓰고. 나 하나 죽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지난주엔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사람들 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옆에 사람 못하는 거. 가끔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그게 화가 나요. 관두지도 못해요.”

“이 얘기하는데, 왜 눈물이 나요?”

“요즘 사소한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대상이 바뀌어요. 나쁜 놈이 사측 관리자에서 우리 쪽 대상으로 좁혀져요. 대상이 좁아지는 게 무서워요.”

한 해고노동자는 연대 동지는 고맙고 반가운데, 같은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나쁜 점만 보인다고 했다. ‘적보다 동지가 더 밍고, 힘들다’는 말을 장기투쟁 하는 노동자들에게 종종 듣는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



정혜신 선생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집단치유상담

“전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죠. 전쟁과 같은 폭력을 겪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부 국가나 공권력과 같이 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초토화시키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분노가 생기겠죠. 국가, 이명박, 경찰청장, 특공대 죽일 놈, 이유일 나쁜 놈. 하지만, 국가는 힘은 막강하지만, 실체가 모호합니다. 화를 낼 대상이 모호해 지는 거죠. 이렇게 가해자가 빠지고, 여러분만 남으면서 피해자끼리 상대적 가해자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정상입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을 갖고, 가엽게 봐주어야 합니다. 본성과 다르게 되는 나를 탓하지 말고, ‘재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가엽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끼리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혜신 선생은 연대동지와의 관계는 좋은 접점에서만 만나지만, 안에 있는 동지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오랫동안 마음 상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투쟁하려면 심리적 거리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조언도 해준다.

주방에서는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치유밥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의 메뉴는 콩나물밥이다. 가족대책위 회원이자 ‘와락’ 상근자인 이정아 씨는 요즘 발언을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고 머릿속이 멍하다고 한다. 77일의 기억에서 도망치려 애썼던 이정아 씨는 지금은 정혜신 선생의 도움으로 그 유령을 맞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이름이 적힌 작업복을 입고 공장 문을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 투쟁 천일. 많이 아프고, 외로운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다독이며 따뜻한 조연자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3월4일 조합원총회를 마치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물음>에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물음에 답을 찾는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에게 막대한 상금을 내리겠다는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자 저명한 학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왕은 그 누구의 대답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현명한 대답을 듣기 위해 지혜가 높기로 이름난 숲속의 은자(隱者)를 찾아가게 된다. 은자는 대답한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단지 현재 뿐이라오.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는 어떤 일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은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소셜미디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일단 성적표부터 살펴보자. 현재 트위터 이용자 숫자는 550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비슷한 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1천만 명이 넘는 숫자다. 이는 국내 10대 일간지 발행부수(구독부수가 아니라)를 전부 합친 숫자보다 많다. 방송 3사의 메인뉴스 시청률을 능가하는 수치다. 바야흐로 뉴미디어가 출현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덩치만 큰 것이 아니다. 소셜미디어 전에 온라인 이슈의 중심에는 다음 아고라가 있었다. 트위터는 아고라에 비해 질적으로도 개선되었다. 아고라는 반쪽이었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정부 비판적인 담론이 주로 펼쳐졌다. 압도적이었다. 반면 트위터는 충분히 균형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양쪽의 의견이 소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아고라나 블로그의 플레이어는 ‘마니아’였다. 해당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 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주류미디어가 코리안시리즈였다면 이곳은 조기축구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조기축구회는 ‘미네르바’라는 걸출한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언더그라운드 2부리그 마이너리그 정도의 취급 밖에 받지 못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다르다.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인 전문가 등 유명인이 대부분 들어와 있다. 비록 모양은 조기축구지만 그 안에 박지성, 박주영, 이청룡, 기성룡이 뛰고 있는 것이다. 경기장이 허름하다고 해서 이것을 조기축구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류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 PD 아나운서의 대부분이 참전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스피드다. 소셜미디어는 빠르다. 주류미디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기사화를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전파되어 버린다. 주류미디어 정규군은 소셜미디어 게릴라들을 속도전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빠르다는 것은 이슈의 프레임을 소셜미디어가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소셜미디어가 이슈를 선도하는 이슈의 청담동이 된 것이다.

‘쌍방향 소통’에서 ‘삼방향 소통’의 시대로



<트위터를 통해 가능했던 일-방콕을 방문했을 때 태국 한류팬들과 번개를 할 수 있었다.>

트위터를 30개월 정도 했다. 그간 17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았다. 흔히 말하는 ‘파워 트위터러’로 꼽히기도 한다. 이쯤 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트위터는 아직도 새롭다. 이곳은 하나의 생태계다. 생태계이기 때문에 끝없이 진화한다. 그 진화하는 모습이 다채롭다.

미디어를 전공하고, 미디어에 종사하면서, 미디어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로서, 트위터의 미디어적 성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인터넷이 이메일과 댓글/덧글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일방향 소통을 쌍방향 소통으로 진화시켰다면 트위터는 쌍방향 소통을 다시 ‘삼방향 소통’으로 진화 시켰다. 소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고전적인 의미의 ‘착한 소통’은 쌍방향 소통이었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나쁜 소통’과 구별되는 이 ‘착한 소통’은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었다. 기자 이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사 밑에 댓글과

덧글을 달아 토론할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 ‘삼방향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삼방향 소통’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트위터에서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얼마든지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만약 길을 가다가 경찰차와 소방차와 구급차가 삼중추돌한 모습을 보고 사진을 올리면 그날의 ‘특종 트위터러’가 되고 있고 정치인들의 꼴불견 행태를 보고 ‘정치인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면서요?’라고 올린 코멘트가 무수히 전달된다면 ‘트위터 논설위원’이 될 수 있다.



<안철수와 박원순은 소셜미디어가 만들어 낸 스타다>

누구나 뉴스와 이슈의 생산자가 되고, 유통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삼방향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만인 대 만인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소통의 뉴런이 되는 것이 바로 바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다. 트위터에서 뉴스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뿐만 아니라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도 관여하게 된다. 시민기자제를 두었던 <오마이뉴스>는 창간하면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명제를 내걸었는데 이제 ‘모든 시민은 미디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소통의 뉴런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적 ‘근육’이 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 ‘힘없는 자의 말’을 함께 전달한다. 유명인이 전달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전달한 글이 이슈가 된다. 마치 <슈퍼스타K2>의 허각이, <슈퍼스타K3>의 울랄라세션이 낙하산으로 우승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문자투표와 ARS 투표를 얻어 챔피언이 되듯, 다중의 의지가 이슈를 만드는 것이다. 일종의 ‘이슈의 패자부활전’이 일어나는 셈이다.



<소셜미디어는 김여진과 같은 소셜테이너의 활동 공간을 넓혀 주었다>

미디어 ‘이전’, 그 ‘이상’, 그리고 ‘이후’의 미디어

이렇게 뉴스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함께 하면서 미디어로서 진화하면서 트위터는 ‘미디어 이전의 미디어’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 ‘미디어 이후의 미디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성장’만 하던 미디어가 트위터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미디어의 진화다. ‘미디어 이전의 미디어’라는 것은 트위터의 속보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식이다. 신라호텔 뷔페식당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다.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자 호텔의 사장은 신문 방송 포털 등 기성언론에 보도되기 전, 오직 트위터에서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서둘러 사과를 결정했다. 기성언론은 트위터를 통해 벌어진 일의 결과만을 보도할 수 있었다.

트위터가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뉴스가 대중의 호기심 혹은 관음증을 충족하기 위해 금도를 넘을 때 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때다. 야구선수와 사귀던 여성아나운서의 자살 소식에 누리꾼들이 선부른 정의감으로 상대 야구선수에게 악플을 다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트위터는 뉴스의 이면을 알려주기도 한다. 주류 미디어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경제손실만을 얘기할 때 트위터의 전문가들은 미디어의 일방적 보도태도를 성토했으며 노동현실을 고발한다.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로서, 여론의 올바른 고민하는 미디어가 된 데에는 파워트위터러들의 공이 크다. 그들은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에 이용당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여론의 ‘성숙’을 이끌어 냈다.

‘미디어 이후의 미디어’로서의 기능은, 뉴스 이후를 고민한다는 점이다. 트위터를 통해 구미시의 단수사태가 이슈화 되면서 미디어들도 따라서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트위터는 그 이후를 고민했다. ‘구미시 물공급 모임’을 만들어 급히 물을 공수했다. 미디어가 해결하지 못하는 ‘so what’에 대한 답을 준 것이다. 언론이 보도할 때 트위터는 행동한다.

소셜미디어를 견제하는 기성 미디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만들어진 '세금혁명당'>

미디어의 핵심 기능은 '의제 설정 기능'이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그 현안은 어떻게 풀려야 할지에 대한 좌표와 방향을 미디어가 제시해준다. 이는 선장의 역할과 비슷하다. 선장의 첫 번째 역할은 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배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 미디어가 소셜미디어에 이 '의제 설정 기능'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자 기성 미디어는 소셜미디어를 괴담 유포의 주범이라고 공격했다. 허무맹랑한 괴담이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무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역사를 되짚어 보자. 연산군 시절에는 임금이 대비를 죽였다는 것이 괴담이었다. 일제시대 독립군이 만주에서 일본군을 몰살시켰다는 것이 괴담이었다. 군부 독재시절에는 광주에서 군인이 시민을 죽였다는 것이 괴담이었다. 이것이 괴담이었나? 언론이 막힐 때 때로 진실이 괴담의 외투를 입고 세상에 나오기도 한다.



<MBC 김재철 사장을 향해 '삼보일찍'을 날린 탁현민씨>

괴담을 걱정하는 자들은 괴담을 누가 유포했는지, 어떻게 유포되었는지에 주목한다. 그러나 괴담은 꽃일 뿐, 뿌리가 될 수 없다. 뿌리를 보라. 대중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괴담 트라우마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열린사회는 비판에 대한 맷집을 요구한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은 태산과 같은 진중함으로 대중을 대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강원도 양구에 '기적의 책'을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자 이제 관건은 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기적의 책꽃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트위터로 진행한 '기적의 책꽃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략 10만 권 정도의 책을 모은 것 같다. '남는 책을 모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자'는 취지에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동참해 주었다. 한 권의 책은 티끌이었지만 모이니 금세 태산이 되었다.

'기적의 책꽃이' 프로젝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기부·봉사 프로그램답게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조직과 시설과 자금 없이 해보자는 것이었다. 누구도 이 조직을 대표하지 않고, 어떤 조직 구조도 두지 않고, 어떤 특별한 시설도 구축하지 않고, 어떤 고정적인 자금도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직과 최소한의 시설을 구축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마치 원하면 무엇이든 내주는 도깨비방망이 같았다. 트위터를 통해 모인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책을 모으고, 분류하고, 전달하는 작업을 해주었다. 시설은 트위터를 통해 남는 공간을 기부 받아서 활용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금 역시 아름다운재단의 소셜펀딩 플랫폼 ‘개미스폰서’를 통해 모았다. 그렇게 모은 7백만 원으로 연말에 북콘서트, ‘모두를 위한 책장’을 멋지게 성공시켰다.

지방 곳곳을 돌아보니,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곳은 많았다. 하지만 가보니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으면 책이 없고, 책이 있어도 보충이 안 되어 낡은 책 뿐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도서관과 서점은 멀어서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곳에 기적이 필요했다. ‘기적의 책꽃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1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 1곳 보다는 1000권의 책이 있는 ‘도서방’ 1000곳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내 방을 우리들의 방으로 확장시킨 ‘도서방’이 많아지면 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적의 책꽃이’에서 1000권 정도의 책을 전달한 ‘도서방’이 벌써 50곳이 넘었다. 1000권까지 ‘고고싱’ 하려고 한다.



<기적의 책꽃이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전달한 후 서로 등을 두들겨 주고 있다>

2012년에는 ‘빈방장학금’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한다. 대학 신입생들 중에 자치방 하숙집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다. 컨셉은 간단하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노부부 중에 40~50평대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부모님 품을 벗어나 상경한 신입생들에게 ‘빈방’을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혀 생뚱맞은 학생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혈연-지연-학연’이 같은 학생들을 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문중 사람이나, 같은 지역 출신, 혹은 모교 후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국민 비상연락망’을 만드는 일이다.



<MC 김제동씨가 화재로 집을 잃은 포이동 재건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위로했다>

소셜미디어는 어떤 곳?

소셜미디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세상을 알아가는 곳이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세상을 접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반쪽 세상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달의 면은 늘 일정하다. 달의 후면을 보여주는 것, 그곳이 바로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미투데이나 메신저서비스 등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도 많다. 그런데 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야 할까? 기존 서비스는 기성세대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곳을 이용하면 세대 내 소통에 머물지 않고 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어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다. 부지런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중 가장 가치가 있는 부지런함은 바로 스스로에게 기회를 부여하는데 부지런한 것이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오기 마련이고 또한 스스로를 알린 사람에게 오곤

한다. 소셜미디어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할지를 찾고 준비된 모습을 알리면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정성하라는 고등학생이 있다. 유튜브 조회 수가 개인으로는 국내 최초로 2억 회를 넘어 소녀시대보다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가 세상에 자신을 알린 수단이 바로 유튜브였다. 존 레논의 아내인 오노 요코도 이 학생을 칭찬했고 세계 유수의 기타리스트들이 그를 불러 협연했다. 그런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트위터에서 ‘골목스타’가 되는 법

트위터의 경우 친구(팔로어)가 늘면 ‘골목 스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더 신이 나서 적극 소통하게 된다. SNS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남들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연예인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일종의 ‘자발적 트루먼 쇼’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고의 트위터스타 소설가 이외수>

그러면 어떻게 골목스타가 될 수 있을까? 연예인도 아닌데 팔로워 100만 명을 넘긴 이외수 선생이 좋은 예다. 이외수 선생의 삶은 자신을 세상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주류 사회나 문단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다. 글을 쓸 때는 교도소 철문을 잠그듯 스스로를 유배시키고 썼다. 급기야 화천의 두메산골(감성마을)로 이주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찾아 산길을 달려온다. 어떻게 그는 예순이 넘는 나이에 ‘꼰대’가 아닌 ‘트윗돌(트위터+아이돌)’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감성마을로 달려가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소통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답했다.

“꼭 달거나 고소한 것만 음식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맵고, 쓰고, 시고, 떼은 것이 섞여 있어야 풍성한 밥상이 된다. 내가 올린 글에는 먹을 것이 고루 섞여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정성을 쏟아붓는다. 무성의하게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다못해 리트윗(전달)을 하는 경우에도 아주 짝막하게나마 언급한다. 독려를 하는 의미에서 올리는 것인데 나름 고심해서 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공감하고 그것을 같이 리트윗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다. 트위터에서는 가급적 생각보다 마음을 담으려 애쓴다.”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화가 메가쵸킹과 MC 남희석씨가 ‘러브샷’을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tip)

포기하지 마세요

트위터 아직 재미없으세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마세요. 설악산 매표소 주변만 보고 설악산 별거 없다, 라고 말하면 우습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계곡의 시원한 바람도 맞아보고, 능선의 그라디에이션도 감상하시고, 꿈결같은 운무도 보고 오세요. 그런 다음 평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발견하세요

트위터가 재미없는 것은 재미없는 사람만 팔로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가 편견어린 곳으로 보이는 것은 편견에 휩싸인 사람만 팔로잉하기 때문입니다. 트위터가 거친 것은 거친 사람만 팔로잉하기 때문입니다. 더 찾아 보세요.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을 찾는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세상과 마찬가지로.

참고하세요

트위터에서 좋은 사람을 찾고 싶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 팔로잉하는 사람을 팔로잉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검증된 것 아닐까요? 트위터에서 재밌는 사람 찾고 싶으면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이 팔로잉하는 사람을 팔로잉 하세요.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이 재밌어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칭찬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 맛팔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맛팔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맛팔해 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하찮은 사람이 됩니다. 대신 칭찬을 해보세요. 입

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팔로잉하게 만듭니다.

또 만나세요

트윗에서의 인간관계는,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가볍게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역에 함께 머물 때 서로 좋은 추억 만들어주
는, 다른 정거장에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인연이 되면 또 만나고, 그렇게
인연이 쌓여가는 것이 순리인 듯합니다.

라디오 틀어놓았다 생각하세요

트윗의 글은 그냥 라디오 틀어놓았다고 생각하시고 흘려보내세요. 붙들려고
용쓸 필요 없어요.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좋은 노래 나오면 귀 기울이듯
좋은 얘기 나오면 새겨들으면 됩니다. 라디오 틀어났다고 귀 쫑긋 세우고 있
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한 땀 한 땀 깨알같이 읽어내려 하지 마세요. 트윗은
직관입니다.

오해도 즐기세요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오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많은 팬을 얻었지
만 적지 않게 안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트위터 덕분에 나를 좋
아하게 된 사람보다 트위터 때문에 나를 싫어하게 된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
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를 오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
도 인간이니깐. 아무튼 이해도 오해의 일부입니다. 그냥 즐기세요.

맞는 말만 하지 마세요

트윗에서 맞는 말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공자도 아니고, 어떻게 맞는 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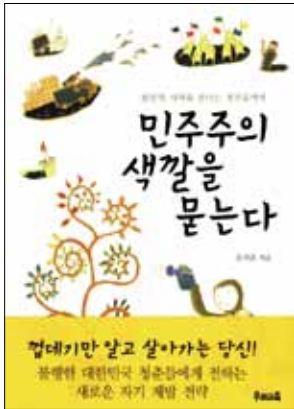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하세요. 괜히 뭐라 하는 사람들 있음 블록(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욕하지욕하고 난리치지 않아도 애정 어린 충고 해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분들 충고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릅니다. 트윗은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 듣는 곳입니다. 도 닦으려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트윗의 완성은 블록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이 얘기도 흘려들으세요. 트윗에 정도는 없습니다. 트위터 본사에서 내린 지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 바로 정도입니다. 트위터의 설계 구조를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것이 유일한 정도입니다. 말하기 싫으면 침묵하면 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민주주의, 자기 자신과 국가의 주인이 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를 읽고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민주주의. 익히 들어왔지만 누군가 ‘그게 대체 뭔데?’하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는 곤란한 낱말이다. 물론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정도의 훌륭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란 건 다들 대충은 알고 있다.(아니, 정확하게는 안다기보다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을 게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당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왜 알아야 하느냐고 누군가 진득하게 물고 늘어지면,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 당신은 어떻게 답할 건가. 거기에 민주주의의 색깔은 뭐냐고 또 물어오면? 이쯤 되면 요샛말로 ‘멘탈(정신)의 붕괴’ 현상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손석춘의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2010, 우리교육)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큰 스승이 아끼는 어린 제자들의 무릎께로 친히 다가가 기초부터 조근조근 일러주듯 친절하게 답하고 있는 책이다. 그 교설의 시작으로 손 선생은 먼저 ‘자기계발’이란 현대인의 화두를 던진다.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나를 채찍질하라”는 이 시대의 아포리즘에서 채찍질 당하는 ‘나’는 누구인가? 계발의 주체이자 대상인 ‘자기’는 과연 존재하는가?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제는 식상한 얘기가 됐겠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의 수면시간은 가장 짧고,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가장 길며, 청장년층의 노동시간은 가장 길고, 노년층의 자살률은 가장 높다는 웃기지만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나’를 더욱 맵게 채찍질한다는 것은 인권 운운을 떠나 실현 자체가 가능치 않다. 해서, ‘나’를 채찍질하기에 앞서 ‘나’를 따져 묻는 것이야말로 허망해 보이지만 절대로 허망하지 않은 ‘진정한 자기계발’의 출발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를 채찍질하는 이, 과연 누구인가? 나의 존엄을 파괴하는 자, 바로 누구인가? 학생 때는 기계적으로 문제집을 풀고 친구의 공책을 찢어서까지 죽어라 경쟁하고, 회사원이 되서는 야근에 승진시험에 직장상사 비위 맞추기에, 그렇게 10대에서 60대까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혹사시키고 찢그러뜨린 결과는, 왜 황혼녘 자살이어야 할까? 왜 이렇게 빠하기만 한, 멋이나 낭만이라곤 시력교정술이나 쌍꺼풀수술한 눈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등신 같은 천편일률의 우리는 그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있나?

바로 이 같은 질문들에서 ‘개인의 탈바꿈’(진정한 자기계발)을 위한 단초가 열린다. 어쨌든 그 머저리 같은 판에 박은 듯한 삶은 본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은, 안됐지만 그 옛날 어릴 적을 제외하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본주의적 욕망, 흔히 말하는 ‘먹고사니즘’이 추동한 자기계발의 광풍 속에 온전한 ‘나’는 증발하고만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자본이란 황제와 그의 친위병인 자기계발이다. 그동안 나를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아픈 자각이 다시 ‘사회의 탈바꿈’(진정한 민주주의)을 향한 돌파구를 들쭉신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제대로 했을 리 없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던 이가 투표가 끝나고 국민의 주인, 아니 국민을 해치는 강도 노릇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 아니, 몇 년에 한번 주인 노릇한답시고 하는 투표는 또 바르게 하길래도 했던가. 87년 6월에 쏜은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군사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핵심인물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나. 그리고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뒤의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는, 또 어떠한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돌파구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 열린다. 물론 이러한 ‘주인 되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와 정확히 포개진다. 각 개인들이 자본주의적 욕망과 가정이나 집단에의 예속 등 여러 가지 방해요인들과 대면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자기로 거듭날 때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토대는 더욱 튼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화한 ‘주인’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아니 전국 골골샅샅에서 이들이 국가에 대해 정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때, 해서 본래의 민주주의 의미인 ‘국가에 대한 민중의 지배’가 마침내 실현될 때, 국가의 머슴이어야 할 강도들은 본연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우리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성인이 됨과 동시에 한 사람의 가치에 등급을 매기고 열패감을 심어주는 서열화한 대학 체제의 해체를, 동성애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신자유주의 다국적 자본의 논리에 맞선 대안적 삶의 모색을,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과 전 시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을, 차례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손 선생은 이 같은 민주주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매일매일 습관처럼 ‘민주주의의 일곱 빗갈’에 물을 주라고 당부한다. 그 일곱 빗갈에 대한 물주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진실에 눈떠라
2. 사람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세력과는 싸워라
3. 신문-방송의 틀을 벗어나 대화하고 토론하라
4. 직업 정치인이 정치를 독점하도록 방관하지 말라
5. 생계 차원을 넘어 창조적 경제생활을 하라
6. 단 한 번인 자신의 인생을 주권자로 살아가라
7.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연대하라

혹시나 싶어 다시 강조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은 ‘민주주의의 일곱 빛깔 습관’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국가에 대한 노예상태를 온존시키며 취할 수 있는 성공이란 없기 때문이다. 절름발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밭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인식제고와 사업범위의 확대를 위한 2012년 활용법

2012년 런던올림픽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화합의 장은 아니다.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독특한 사업모델인 협동조합에게 큰 기회이다. 전 세계 경기침체의 피해를 수습해야 하는 지금 이 기회를 통해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2012년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인식증진과 사업범위확대 그리고 미래 협동조합세대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2012년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국 회원 생협들에 의한 페스티벌, 전시회, 회의를 포함하여 전 세계 10,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일간의 10월 맨체스터 엑스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국 내에서 영국 생협 코퍼라티브그룹이 수년간 중심이 되어 이끌어왔던 협동조합 르네상스가 2012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예로 주요 논평가들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훌륭한 계획으로 호평 받은 ‘윤리적 계획’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존의 사회, 환경 설정 목표의 폭을 넓히기로 결정되었다.

폭넓은 관심을 얻고 있는 계획 중 하나는 신생 협동조합들을 재정, 실무 면에서 지원하는 선구적인 ‘기업 허브(Enterprise Hub)’이다. 지난 3년간 영국 협동조합 진영은 이 허브에 7백 5십만 파운드를 투자함으로써 매일 새로운 협동

조합 기업이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일자리창출과 강한 단결력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지원은 영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뉴욕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포식에서 제3세계의 협동조합을 위한 자본 기반 프로젝트로 금융지원을 하는 글로벌 발전 협동조합 기금(Global Development Co-operative) 사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코퍼라티브 그룹과 ICA의 주도에 의하여 고안된 이 사업은 저금리대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 및 현대식 기기를 구입하거나 물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창고 시설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발전을 위해 지원될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 모델을 강조할 수 있는 매우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아이디어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협동조합이 더욱 활발한 한 해를 만들 것이다.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이 시점에 협동조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사업이 계속되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및 경제 분야의 난관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협동조합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우수성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하여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협동조합이 사회경제 분야에서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자극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주식보유자보다 3배 이상 많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

비교 분석 결과 전 세계 주식 보유자들의 수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퍼레이티브 그룹 UK의 사무총장 Ed Mayo는 2012년 1월에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주식보유자들의 수보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Ed Mayo는 “주식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 기업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협동조합보다 주식회사에 언론, 정부, 학계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불균형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간 동안 바로 잡아야 하는 핵심적인 모순 중 하나이다. Ed Mayo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협동조합 기업을 통틀어 환산했을 때 36조 6천억 US 달러의 주식 가치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려낸다면 이와 같은 모순은 일부분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ICA가 최근 발표한 Global 300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가 가장 큰 300개 협동조합의 전체 매출은 약 1조 6천억 US 달러로 집계되었다.

Mayo는 ICA의 협동조합 자료와 공식적인 주식 시장에 상장된 영국과 미국의 70개 기업 주식 보유자들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신흥과 농협이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등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실천하며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네 나라의 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주식 보유자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해당 보고서에 담긴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인구의 절반을 넘는 세 개 나라는 모두 유럽 국가로 아일랜드(70%), 핀란드(60%), 오스트리아(59%)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도(2억4천2백만), 중국(1억6천만), 미국(1억천만)이다.

-남미,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5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주식 시장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 7%에 해당한다.

-아프리카에는 13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며 주식 보유자보다 6배나 많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한다.

-전체 인구 중 주식 보유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31%)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¹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새로운 미국 협동조합 법안

미국 정부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독려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표하며 미국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 발효되면 협동조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전미 협동조합 발전 법안'의 중심 내용은,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으로 협동조합 분과 의장인 Chaka Fattah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하였다. Paul Hazen 전미협동조합사업연합회 회장은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지역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려면 미국에 더 많은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법안 통과를 지지해준 사람들은)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자원과 방안이 지원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은 미국이 실업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협동조합 기업들이 우리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경제 시스템에 매우 특별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부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¹ 전체보고서는 http://www.2012.coop/sites/default/files/media_items/Global%20business%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 대학들에 대한 인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해 기술적 지원, 안내 등 최상의 조건 제공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그룹에게 초반 투입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출 기금 마련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훈련을 위한 기금 제공

-협동조합이 없는 지역 내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 개발 센터 설립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2012년은 협동조합 메시지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캠페인 블로그 담당자였던 Sam Graham-Felson은 2011년 11월에 열린 ICA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그는 총회 참석자들에게 협동조합의 해에 대한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것을 강조하였다.

ICA는 Sam의 조언처럼 협동조합의 해를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 2012.coop 개설을 칸쿤에서 발표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ICA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전 세계 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한데 모아둔 곳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협동조합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행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일정표와 그 날의 협동조합 이야기와 같은 부가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더불어 IYC와 관련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ICA의 모든 소셜 미디어 기능들이 링크되어 있기도 하다.

2012년을 위한 또 다른 온라인 프로젝트인 stories.coop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협동조합들에 관련된 소식을 전 세계에 퍼트리하고자 2012년의 매일 매일 다양한 협동조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지하고 있다. 2012.coop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웹사이트와 연결된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해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멋진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 세계 ICA 회원들은 폴뿌리처럼 연결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IYC라는 단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월12일 목요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도시들이 IYC 선포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그들 모두 Global News Hub와 다양한 온라인 방법을 통해 행사를 홍보하였다. 조합원들은 트위터를 통해 coops2012에 연결된 IYC 공식 태그를 백만 명에게 알렸으며 ICA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선포식이 있던 주에 3,000번 이상의 방문자가 접속하였다.

페이스북 사이트는 IYC: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이다.

ICA, YouTube 채널 개설

ICA의 새로운 YouTube 웹페이지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의 생생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동영상은 협동조합운동 진영 내 저명한 사람들의 연설뿐만 아니라 캠페인 동영상이나 협동조합 리더들과의 인터뷰도 업로드된다. 또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장점에 대해 협동조합 분야의 저명인사들의 호평을 담은 비디오도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UN세계협동조합 관련 영상과 칸쿤 정기총회 동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user/icacooperative?blend=1&ob=video-mustangbase>

EU ‘전화번호부’에 수록되는 협동조합

유럽연합집행기관은 EU직원들을 위해 시민사회 조직들과 관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기관의 정보 제공 수단인 명단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 자료는 주요 네트워크망 및 ICA지역 사무소, 회원조직의 연락처와 간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협동조합 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명단은 EU의 지역사무국에 전달되며 전 세계 시민사회네트워크와 관련된 정확하면서 최신의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자료들은 EU직원들이 시민사회나 협력기관과의 대화를 하거나 기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 개발 및 협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집약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EU지역 사무국 직원들과 좀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유럽연합집행기관의 집행기관총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및 협동’ 프로젝트를 위해 착수되었으며 이는 2009년부터 유럽협동조합(Cooperatives Europe)이 참여한 ‘구조적 대화Structured Dialogue’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2012년 ICA의 주요일정>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	
5월	ICA유럽지역총회
10월 8~11일	2012세계협동조합 정상회의(캐나다)
11월 25~30일	ICA-AP지역총회, 고베(일본)
미정	ICA미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 키갈리(르완다)
10월 31일~11월 2일	제3회 ICA엑스포, 맨체스터(영국)

(출처: ICA Digest 73호 및 ICA eDigest 창간호(5월)) 

생산기반을 지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수매선수금 운동

조합원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물품이용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매선수금 운동은 본인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미리 냄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이용할 물품의 생산, 수매에 필요한 자금(영농, 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수매선수금 운동을 하는 이유

1.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해서는 생협의 계약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확보를 위해 수매자금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생협과 계약생산지 간의 생산계약과 계약금 우선 지급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약 100~130억 원이, 가을철 주작곡류의 수매를 위해서는 약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3. iCOOP생협 조합원 중 1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수매선수금 운동을 통해 생산자와의 생산계약과 영농지원에 필요한 자금 및 가을철 수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참여방법

1. 100만원 정액 참여방식
 - ① 참여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② 1회 100만원씩 횟수 제한없이 참여합니다.
2. 월 이용금액 참여방식
 - ① 매월 이용금액을 선수금으로 납입(조합원 월 평균 이용금액: 약 20~30만 원)
 - ② 최소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약정하여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때 자본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1. 온라인 : 장보기 로그인 후 참여신청
2. 매장 : 매장에 비치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참여신청

문의: 1577-0014 인터넷 : <http://www.icoop.or.kr/coopmall>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CO-OPERATIVES JOURNAL vol.6 Spring 2012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Democracy and Cooperatives:

Roles of cooperatives for democracy development

JEONG, Taerin

European cooperatives drive democracy to reinforce

JEONG, Wŏngak

Cooperative enterprises in Europe : realized industrial democracy in field

KIM, Hyundae

Cooperatives democracy in Japan

Skimoto Takashi

In 1970s, Korean cooperatives' aims for democracy

SHIN, Cheolyoung

Round-table :

Cooperatives comment on democracy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